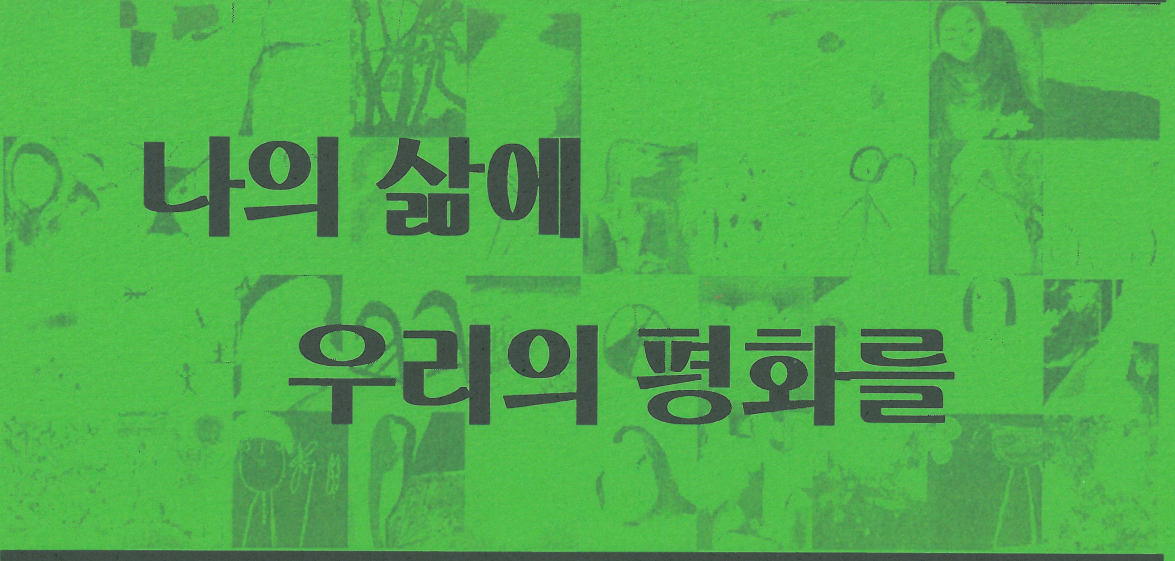


2002 서울 국제회의 준비 워크샵



나의 삶에 우리의 평화를

-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

일시 : 2002년 6월 15일, 6월 22일,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토) 오후 4시

장소 : 여성평화의 집 회의실(중구 장충동 1가 38-84)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
(두레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
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소리회, 안일순 이상 무순)

홈페이지 <http://safe.jinbo.net/>

글 실는 순서

0. 2002 서울 국제회의 준비를 위한 워킹 프로그램 소개	 2
1.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SAFE)의 모든 것 - 유영남(두레방)	 3
2. 군사주의와 여성 - 김엘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6
3. 한국민족주의와 인권 - 정유진(우한미군법외근절운동본부)	 18
4. 참여단체 평화운동의 소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37
- 평화인권연대	 44
5. 참고자료	
-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47
Gwyn Kirk and Margo Okazawa-Rey(미국 평화운동가)	
-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보장 - 안전보장 재(再)정의를 향해	 53
다자사프 스프요(가치 군대를 허락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 안전보장을 재정의한다	 59
벤티 뷔든(콜롬비아대학 평화교육학과)	
6. 성명서 모음	
- 여성과 야동, 군대 및 인권	 64
국제 여성 연구 회의, 나하, 오키나와, 1997. 5. 1-4. 최종성명서	
-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보 재정의	 67
2회 국제회의, 워싱턴, 미국, 1998. 10. 9-13. 최종성명서	
-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	 70
3회 국제회의, 나하, 오키나와, 2000. 5. 22-25. 최종성명서	
- 성(gender)과 인간 안보 네트워크 성명서	 73

1. 워킹의 목적

- 1) 국제회의의 방향과 성격에 관한 논의를 모으고, 군사주의 문제를 중심으로 여성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문제의식을 심화시킨다.
- 2) 군사주의와 여성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평화에 관한 답론을 만들고, 한국여성평화운동 방향 논의의 계기를 만든다.

2. 내용 (주제, 진행자, 발제자)

- 1) 6월 15일 (토) : '한국여성평화 네트워크'의 모듬 것

- 진행: 안일순 (소설가, 홍보팀원)
- 발제: 유영님 (두레방, 공동집행위원장)

- 2) 6월 22일 (토) : 군사주의와 여성

- 진행: 김동심 (두레방, 조직팀장)
- 발제: 김엘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교육팀장)

- 3) 6월 29일 (토) : 한국인폭주의와 인권

- 진행: 최장민 (평화인권연대, 홍보팀장)
- 발제: 정유진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4) 7월 6일 (토) : 한국평화운동의 사례들: 각 참여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 진행: 고유경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 교육팀원)
- 발제: 각 회원 단체 발표

- 5) 7월 13일 (토) : 못다한 이야기 (총괄과 평가)

- 진행: 조진경 (교회여성연합회, 교육팀원)

1. 시작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라는 긴 이름의 네트워크 활동이 시작된 것도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듯 하다. 제1차 공식적인 국제모임이 1997년 5월 일본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있었으나 그 토대가 되는 활동들은 군사주의 문제에 일찍이 눈을 뜬 여성운동가들에 의해서 그 훨씬 전인 1990년대 초반부터 있어왔다. 1995년에는 안일순 선생과 현장출신 운동가인 김영자 선생, 사진작가인 안혜룡 선생이 미국 5대 도시를 순회하며 강연회를 가졌다.¹⁾

이 문제를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의 틀 안에서 해결해보고자 네트워크를 결성한 주체는 미국의 마고 오키자와 레이(Margo Okazawa-Rey)와 구웬 커크(Gwyn Kirk)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94년 한국 방문중에 목격한 기지촌 혼혈아들에게서 큰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의 해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아시아 땅, 특히 한국 땅, 오산, 외정부 등지의 기지촌을 방문하면서 양국 정부로부터 내동댕이쳐진 채 상태미를 통해 성계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기지촌 언마의 자식들로 태어나 차별받으며 성장하는 혼혈아동들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쳐서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를 찾았다. 그 첫 결과가 “Margo Report”²⁾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네트워크 활동에서 몇 가지 중요한 성격을 규정짓게 된다.

첫째는 평화운동의 틀을 다지는 일과 군사주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것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여성과 그 아이들의 시작으로 일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하는가에 중요한 색깔을 규정짓는 네트워크 회의는 그래서 이에 합당한 국가와 조직, 그리고 사람들로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조직과 여성운동가들로 구성되었고 오키나와와 일본에서는 쓰쓰요 타카자토를 중심으로 Okinawa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란 단체와 동경, 유후인 현장 활동가들 및 시민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필리핀에서는 가장 큰 미군기지가 있던 울루가토 시의 Buklod Center를 축으로 하여

1) 이 원고는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두레방이야기』(두레방, 개마서원, 2001.)에 수록되어 있다.

2) 『두레방이야기』(두레방, 개마서원, 2001.)에 수록.

Aida Santos, Alma Bulawan 등이 참여하였다. 한국은 현장단체인 두레방과 새움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와 여성운동가인 신혜수 선생, 작가 안일순 선생이 참여하였다.

물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안전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인간안보”가 최우선시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든 논의의 초점은 현장사람들의 증언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회의

제1차 회의는, 오랫동안 미군이 주둔하여 성 전체 주민들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오지나와 나하시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행해진 기초 연구에 대한 보고와 공유된 관점을 확인하고, 방법론의 다양성을 이용하는 협력적이고 조직화된 연구의제를 계획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미군의 존재가 여성들에게 끼치는 악영향과 한국, 오지나와, 필리핀의 미국계 혼혈아들의 비참한 생활실상을 상세히 보고하고자 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정책입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의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한국측에서는 두레방의 실무자들과 현장여성,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전유진, 새움터의 실무자들, 안일순 선생, 기지촌 여성운동가인 김연자 선생, 여성운동가 신혜수 선생이 참여하였다.

제2차 회의는 1998년 10월 9일 -13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렸다. 세계의 모든 곳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미국의 군사적 정책들이 결정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³⁾ 회의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을 재확인한다”는 제목으로 다섯 주제로 열렸다. 첫째는 미군주둔으로 인한 주둔국의 환경오염 문제, 둘째는 성폭력 피해여성문제, 셋째 조약(Treaty), 넷째 Amerasian people 이다.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들은 성명서로 작성되었다. 성명서의 요점은 미국군대가 여성과 아이들에게 안전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주의는 구조적인 폭력구조이고 군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여성과 아이들을 희생물로 만들고, 미군속들을 전쟁 기계들로 전환시킨다고 본다⁴⁾는 내용이다. 네트워킹은 성명서를 통해서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였는데, 주둔국과 맺은 불평등한 SOFA 문제나 주둔국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지문제, 철수이후의 정화비용 문제를 책임지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응할 것, 군기지 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군과 군속들을 위한 R and R의 불법화와 철

3) 회의 내용은 『두레방이야기』(두레방, 재마서원, 2001) 234-216쪽 참조.

4) 자세한 내용은 “Notes on Demilitarization and Redefining Security for Women and Children”(제2차 회의) 참조.

수를 요구하였고, 혼혈아동들의 건강과 교육, 이민국제를 미국정부가 지원할 것, 이들을 위한 이 방법을 만들고 재정을 책임질 것, 일본과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과 무기, 미군축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군사비용에 쓰는 대신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재정을 쓸 것 등등 사실상 문제가 제기된 모든 것에 대해 미국정부의 시정을 담당하게 요구하였다. 이 회의는 총 35명의 평화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제3차 회의는 2000년 8월 오키나와 나하시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여성평화운동가 한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 제목은 제2차 회의와 똑같이 "Redefining Security for Women and Children"이었고 90여명이 참석하였다.

3. 전망

제4차 회의는 8월에 한국에서 있을 예정이다. 회의의 주제는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 : 군사주의와 여성인권"으로 ① 군사주의와 여성, 탈군사화 ② 지구화와 군사주의: 9.11사태를 중심으로 ③ 기지촌에 유입된 외국여성들의 실태를 기초발제 할 예정이다.

논의는 탈군사화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을 위하여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군사주의, 군사화, 군사문화의 해체 및 군사주의적 폭력으로부터 여성, 아동, 지역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사주의로부터 생태계를 보전하며, 미군기지 반환과 여성, 지역주민을 위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도록 짜여져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푸레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새움터, 평화인권연대,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이고 개인으로는 안일순 선생이 참여하고 있다.

제3차 회의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충분히 표현되었다고 생각된다. 단지 더욱 논의의 쟁점이 되어야 할 점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들이 나오고,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을 뿐이다.

가장 시급히 평화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에서 어떻게 평화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분단과 미군주둔 50년의 군사주의가 극복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회의를 기대해본다.

2.

군사주의와 여성⁵⁾

김영리 (평화불만드는여성회 정책기획위원장)

1. 군사주의란?

군사주의란 용어는 다소 모호하고 다양하다. 한국사회에서 군사주의는 낯설기까지 하다.

일반적으로 군사주의란 “군사 영역이 시민 영역을 지배하거나, 호전적인 가치가 사회에 퍼져있는 것”을 가리킨다⁶⁾. 전통적 의미에서 군사주의는 ‘전투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라고 알려져 있다 (Shaw, 1991: 9). 이 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본다면, 사회,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전 산업사회가 과도하게 전쟁준비와 관련되었을 때, 군사주의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주의의 전통적 개념의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과연 군사제도(military system)와 비군사제도(non-military system)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가? 군사영역과 시민영역이 독립된 별개의 것인데, 때에 따라서 군사적 요소들이 시민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군사제도가 사회구조 안에 있고 사회는 군사제도를 형성하고 재생산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는 군-산-학 복합체이다. 2001년 아프간 전쟁 발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의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그 배경에 있다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다. 90년대 미국 방위산업체의 구조조정은 마치 군사영역이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민수산업이 언제든지 군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체제를 갖추었으며, 두 영역의 결합도가 더 깊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윤점호, 1996).

사실상,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되어 사용될 수 있을 지언정, 현실적으로 그 구분이 어렵다. 그 만큼 두 영역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서 상호연관되어있다. 8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탈냉전시대가 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종교와 종족갈

5) 이 글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군사주의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군사주의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결과물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동안 군사주의와 여성에 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글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6) 자세한 내용은 Gillis J. (1989) 1-7쪽, Shaw M. (1992) 9-15, 66-73쪽 참조.

등, 사회적 차별, 경제적 부정의 등에 의해 야기된 갈등에 있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평화와 연구의 초점은 그 사회의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맞추어져 왔다. 군사주의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갈통(Galtung, 1985)은 한 사회의 군사주의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관계들을 생산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⁷⁾.

갈통의 이러한 통찰력은 군사주의가 단순히 경제, 정치, 군사적 지표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모하메드(Mohammed, 1985:46)는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군사화 경향의 척도를 GDP에 대한 군사비 비율, 군사력의 정도, 정치영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정도 등에 둔다. 이러한 지표는 군사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시화시키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나, 군사화의 전반적이고 통괄적인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지는 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질문은 의미 있다.

첫째, 2002년 911 사태가 발생하고, 곧바로 미국 부시가 보복전쟁을 선포하였을 때, 미국인의 84%가 전쟁을 지지한다는 여론발표가 여론을 압도적으로 주도하였다. 나아가 선조가가 윌버하고 이슬람에 대한 뚜렷한 적대감이 고조되었다.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쟁이나 폭력으로 해결하는 데 지지하는 경향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군사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따라서, 군사적 요소들이 시민사회 영역을 지배하면서 전쟁을 우호하는 가치가 사회에 광배해졌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개념, 군사화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사화된 군사주의가 개인, 사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권인숙(2000)은 군사화를 군사주의의 일상화, 사회화를 일컫는 개념으로 보고, 군사주의가 일상적 삶 속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그림자의 회계모니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인들은 자신을 군사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버릇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처럼" "담연시 여기고 사는 것 속에 감춰져 있는 품의"로서 군사화과정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이다 (2000: 147- 149).

군사주의라는 개념을 특정한 군사적 집단이나 정치경제의 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전체의 군사화를 조망함으로써 일상적 삶으로 확대시킨 이러한 입장은 인로(Enloe)의 설명에서 자세히 표현된다. 인로는 전쟁 때만이 아니라 평화라고 불리우는 평상시에도 군사화는 발생한다고 본다. 장난감, 결혼, 과학연구, 대학 커리큘럼, 모성, 부성, 패션 등 사회의 어떤 부분이든지 군대 또는 군사적 가치에 의존되거나 통제될 때 군사화는 일어난다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Enloe, 1993: 100). 이로써 인로나 권인숙은 전통적 군사주의의 개념이 포착하지 못한 군사주의의 광범위한 확

7) 케노이(Chenoy)의 군사주의 개념은 보다 전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항상시 실행되고 있는 사회구조적 인식에 가깝다. 그는 군사화를 "강제적 구조와 실행의 사용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보고, 군사주의를 "강제적 구조와 실행에 의존하고 이를 완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다.(1998:101) 그에겐 군사화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군사독재에 기반을 둔 군대화 이의 구조에 전반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8) Shaw (1991:71)와 최장집 (1989: 126-127), Schofield (1994)도 모하메드처럼 경제, 정치, 군사분야에서의 척도를 군사화 측정의 기준으로 보고 글을 전개하고 있다.

산과 길이 자리잡은 내면화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물론, 전통적 군사주의의 개념에서 여성은 어디에 있는가? 군사영역이 남성의 영역이라면, 군사주의는 여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문제인가? 전통적 군사주의의 정의에서 탈지 못할 여성적 관점이 페미니스트 학자들에 의해서 살아나고 있다.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군사주의 또는 군사화라는 개념을 구조화된 전제와 연관시켜 설명한다. 콕(Cock, 1994)은 군사화를 '전쟁을 위한 자원의 동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동원은 남녀의 성(gender)관계를 규정하는 보다 넓은 과정을 수반한다고 본다. 콜라인(1998), 사로니(1992), 리어든(1986)은 국가의 군사화가 가부장적인 사회적 구조와 상호작용한다고 보고, 군사활동의 상황에서 성 정체성, 성관계가 구성되는 사회적 맥락을 밝히고 있다.

이제, 군사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점은 군사영역이 정치, 경제와의 깊은 상호연관성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통제수치와 국제 정치적 행위들에서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우리의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통찰의 깊이를 요구한다. 일상적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사화, 가부장적 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작동하는 군사주의가 바로 내 안에, 우리의 삶안에 있다는 인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보다 확장된 관점(perspectives)을 제공할 것이다.

2. 군사주의의 특징

1) 다차원적인 군사주의

군사주의란 군사적 가치를 고무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가치, 신념의 체계, 사고와 행동양식의 결합성을 일컫는다. 이러한 결합성은 다양한 정치제도, 사회구조와 상호작용하면서 발현됨으로 군사주의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형태와 내용을 갖는다. 각 상이한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식민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와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와 함께 공존한다(Chenoy, 1998: 103, 108). 따라서 군사화된 구조는 다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상이하게 존재한다. 심지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 미국과 같이 민주적 성향이 강한 정치체제를 갖춘 국가라고 할지라도 제3세계나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군사주의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데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군사주의도 한박향 민족주의⁹⁾, 일본 식민통치의 역사,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 등을 살

9) 한국형 민족주의와 군사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표출되는지 관한 내용은 문승숙, "Begetting the Nation: The Androcentric Discourse of National History and Tradition in South Korea," in E.H. Kim and C.Choi eds., *Dangerous Women: Gender & Korean Nationalism*, NY and London: Routledge, 1998 참조하세요.

해보지 않고서는 충분한 설명을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요소들과 함께 존재해 왔다. 결정적으로 한국사회는 약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을 경험하였는데, 이는 학교, 기업 등 사회조직이 준전 시제제를 이루는 가장 극단적이고 고정적인 군사주의의 유형에 속한다. 이때에 한국의 군사주의는 크게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 경제발전주의, 유교전통이라는 세 가지의 이데올로기와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군사화의 과정을 참출하였다고 보여진다(김엘리, 2002).

2) 사회적 군사화와 동원

군사주의는 대중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프로파간다를 수반한다. 획일적인 유니폼, 반복되는 훈장, 메달, 장엄한 군사밴드 등 다소 밋있고, 지루함을 고조시키는 상징성 안에서 표현된다. '적'의 이미지를 참출하고 이와 구분되는 '우리'라는 정체감의 소속을 국가안보 담론에서 강화하면서 군사화는 진행된다.

일방적 명령과 무조건의 복종 관계, 가부장적 위계질서, 조직질서를 위한 폭력사용 등과 같은 군사적 방법이 사회조직이나 인간관계에서 하나의 모델로 적용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때, 병사훈련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사회 교육프로그램의 원리가 될 때, 우리는 이를 군사주의의 과정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군사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주요한 개념은 동원(mobilization)과 참여(participation)이다 (Shaw, 1991). 대중들이 어떻게 군사화의 과정에 동원되고, 이를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참여하게 되었는가하는 점이다. 한국사회에서 군사화의 과정에 전 국민이 동원되고 있는 사회적 기제는 징병제이다. 징병제를 당연한 국방의무로 받아들이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며, 군대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무시, 그리고 군대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자연스러운 사회, -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의식적이든 아니든 전쟁준비에 참여하면서 군사화의 과정에 있음을 보여준다.

3) 남성성과 군사주의

손택수(1990)는 군사주의를 세 가지 상징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력, 총, 발기. 이는 남성들의 물리적 폭력, 성폭력 그리고 전쟁은 한 선상에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트웰라이트는 이를 보다 수 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남성들은 뿔기를 죽임으로써 다시 태어난다. 그들은 죽은 어떤 것으로부터 항상 서있고, 다시- 발기한다. 전쟁은 남성들이 출산하는 이러한 방식 중의 가장 전형적인 첫 번째에 위치한다 (Theweleit, 1993: 284).

군사주의가 정형화된 (idealized) 남성성과 남성권력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밝히고자 한 여성 학자들은 군사주의 또는 군대가 남성성에 의해 남성을 위해서 전유되어져왔음을 전제한다 (Cohn, 1996; Reardon, 1986; Brock-Utne, 1985; Enloe, 1983). 그리고 군대 정통은 남성성에 관한 남성의 사유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진짜 남성으로 태어나기 위한 사회화의 주요한 기관이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자신이 '여자' 나 '게이'가 아니라는 끊임없는 부징과 자신 안에 있는 여성성을 증오하고 두려워하며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연대감을 형성하고, 남성의 정체성과 역할은 국가 방어자 이자 여성과 약자의 보호자라는 신화 속에서 정착한다. 여성은 나약하여 강한 남성에게 의존하여야 하고 보호받아야한다는 신화가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반복, 강화된다 (Peach, 1996: 162, Cock, 1994: 167-168).

이렇듯 군사주의는 구조화된 젠더(gender)에 의존하고 있다. 리어돈(Reardon, 1986)과 엔로(Enloe 1983)는 군사주의가 가부장제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적 가치와 개념은 가부장제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한 예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살펴보자. 군대가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에서 비롯된다. 국가안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사회질서 유지란 젠더화된 가부장적 질서 유지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하면,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남성의 권력은 국가안보 강화를 통해서 발현된 군사주의에 의해서 합법화되고 강화되어져왔다고 볼 수 있다.

4.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학자들의 비판: 세 가지 입장

군사주의 분석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의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한다. (1) 전쟁이나 전쟁준비는 남성의 일 또는 남성의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왔다는 점 (2) 이는 여성이 생물학적인 면에서 전쟁관련에 있어서 무적질하게 여겨져 왔다는 점 (3) 따라서 여성은 전투나 국방의무에서 배제되고, 전쟁담론에서 주변화되며, 피보호자, 피방어자의 역할로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전쟁담론에서 여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여성들이 배제된 전쟁담론에서 여성을 어떻게 위치지을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되어진다.¹⁰⁾

10) 세 가지 분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arony S. "Every Woman is an Occupied Territory: The Politics of Militarism and Sexism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Journal of Gender Studies* 114: 445-462. 전쟁과 여성 문제를 이해하는데 사용된 세 가지 관점에 대한 설명은 Skjelsbaek Inger, "Sexual Violence and War: Mapping Out a Complex Relationship," *EJIR*

1) 군대로 가라: 광범한 권리와 시민권 획득을 위하여

스팀(Stiehm, 1988), 피치(Peach, 1996), 허버트(Herbert, 1994) 같은 학자들은 군사문제에서 여성들이 배제되고 있고, 군대 내에서 성별분업에 따라 남녀 역할이 고정되어 있으며,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 그래서 여성들의 불평등한 지위와 비가시성을 남녀평등과 가시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동등한 기회와 차별없는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도 군대에 진출하여 남성들과 같은 기회를 갖고, 남성들처럼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스팀(Stiehm)은 여성이 군대에 진출한다면 '전쟁은 남자의 것'이며, '전사로서의 보호자=남성 / 피보호자=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체계성의 구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의 시민권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여성들의 권력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운동의 전략성을 갖는다.

이러한 입장이 한국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군대에도 여성들이 있다는 현실성의 문제이다.

(2) 여성들은 군대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기회와 능력인정을 받지 못하여, 남성들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거나, 진급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

(3) 군대 내에서도 성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

최근, 한국여성연합이 선정한 10대 뉴스에 한 여성이 장군 진급이 채택되었다. 정부나 언론은 여대를 가나 이 문제를 남녀평등의 한 척도로서 얘기를 하곤 한다. 이는 지난 결혼전 때, 유연 연합군 구성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이 군대에서의 남녀평등의 지표로 평가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남녀평등이라는 여성적 관점으로서만 접근하는 입장에 대하여 광화문 동가들에게는 명쾌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첫째, 무엇을 위한 평등인가?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군대나 전쟁의 속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빠져있다. 군대는 죽임과 파괴라는 태생적 특성을 갖고 있고, 남성중심적인 전통과 관행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의 속성을 간과하고, 여성들이 군대에 진출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한다는 여성해방적 논리의 틀에만 국한된다면, 평화주의자의 통전적 관점을 상실한, 균형 잃은 주장으로 하락될 소지가 있다. 심지어 리어튼이나 브록-스넬, 인로가 지적하듯이, 이는 군사화를 표출하는 한 사회적 증상이라는 비판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안보의 주체자로서 여성을 자리매김하는데 있어서,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개념에 여성을 과연 위치지를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피치(Peach)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자녀양육 문제에만 골몰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와서 다른 자녀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국가방위의 합법

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한다 (1996: 179). 그러나 왜 하필이면 군사력에 기반한 안보에 굳이 참여하여야 하는가? 갈등해결을 위한 억지론이나 군사력 우위의 힘 균형론에 의존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 인권과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인보의 주체자로서 여성들이 나서는 다양한 노력들을 만들어갈 수는 없는가?

2) 여성성이 더 낮다: 평화주의자가 되기 위하여

첫 번째 입장이 여성은 남성과 같다는 이데올로기적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두번째 입장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입장에 따르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 생활경험, 알파 행위의 과정이 남성과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적인 군대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왔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사회적 경험에서 획득되어진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나 평화에 대한 갈구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강하며, 이는 남성에 대한 우월성으로 간주되고 있다(Reardon, 1986; Brock-Utne, 1985; Ruddick, 1989).

루딕(Ruddick, 1989)은 '군사적 사고는 조직화된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는 반면, '모성적 사고는 생명을 약속한다'며 파괴와 죽음으로 일하는 군사주의의 결과와 생명참조와 돌봄이라는 얼마노릇(mothering)을 대조시키고 있다. 남성의 전쟁으로부터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여성의 돌봄의 역사에서 기인하며, 이는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주요한 가치와 주제로 취급된다.

실질적으로 모성, 돌봄이라는 가치는 서구여성운동 못지 않게 한국여성평화운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주요한 이미지로서 자리잡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여성평화운동의 이론화 작업을 해왔던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의 김은옥 원장의 글¹¹⁾은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방향에 대한 주요한 표시를 이루는데, 주요논조는 남성들이 역사적으로 만들어온 폭력과 불평등의 현실을 여성적 사고로서 전향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모성적 가치의 사회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를만드는여성회>와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은 운동의 전략상, 모성적 가치 또는 여성적 가치를 하나의 이미지로 내세운 적이 있다. 한 성명서에도 생명존치라는 측면을 여성의 재생산의 경험과 연결시켜 여성적 가치에 근거한 평화운동의 입장을 내세웠고, 최근 전쟁반대 집회에서도 어린아이를 집회참가자 대열 맨 앞쪽에 세움으로써 어머니-아이 라는 관계성의 생명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작년, <평화어머니회>가 결성되면서, 마치 여성평화운동은 여성=어머니=평화주의라는 기존의 이원론적 이미지가 굳어지는 인상마저 주었다.

실질적으로 여성적 가치와 모성적 가치가 운동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큰 에너지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참으로 대중적이고 상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성과 모성이 갖고 있는 돌봄과 나눔의 가치를 생물학적 본질론으로 환원하지 않은 채, 여성의 다양한 정체성을 은폐시키지 않은 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확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이를 위해서는 여성

[1] 김은옥, "한반도의 평화와 여성," 『여성평화 1집』,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편, 1989.

성과 모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는 다소 복잡한 논쟁이 될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한 가지 점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여성성과 모성적 사고를 긍정적으로 우위에 두는 논리는 남자=전사, 여성=평화만드는자 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기초하는데, 이는 기존의 이원론적 철학과 사회구성 이해에 기반하는 것으로서, 복잡한 정치적 현실과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다양한 관계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 문제의식이 있다.

자세히 본다면, 첫째, 이분법적 사고는 여성을 집단적으로 가부장적 사회의 피해자, 전쟁의 피해자 또는 전쟁으로부터 결핵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압의 경험도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에 타협하고 협상하는 행위자(agency)라는 점도 간파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여성은 주변의 남성들을 어머니로서, 애인으로서, 동생으로서 군대를 보내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군대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을 갖지 못한 아들이 있을 때, 또는 교육을 더 받고 싶어하는 아들이 있을 때, 군대와 사관학교가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명예를 제공한다면, 가난한 그 어머니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단순히 피해자라고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 구조와 사회적 관계망에 얽혀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성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적응하고, 협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여성들의 군대진출이 증가하고,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 전선에서 여성 전사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은 단순히 전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떠한 편지를 가지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점도 고민스럽다. 왜냐하면, 평화운동이 폭력성을 지양하는 것이라면, 그 폭력성의 허용범위가 어떤 맥락에서 어디까지인가하는 난처함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군의 합법적 폭력성, 제국주의가 제3세계에 가한 폭력성에 대한 비판은 그동안 날카로웠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해방운동에서의 폭력 문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폭력적인 방법에 대하여 우리는 또 다른 지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사용할 것 인가하는 문제 역시, 평화운동을 만들어가는 주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군사적 중심의 안보를 지지하는 보수적 평화론자가 말하는 평화개념과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이기에 더 예리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3) 사회구성적 입장: 성별화된 군사화 (gendered militarization)

세 번째 입장은 성역할과 관계가 전쟁담론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다는 전제에서 군사화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남성성과 여성성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입장이다 (Klein, 1998; Enloe 1993, 1989, 1983; Sharoni, 1992). 이는 첫 번째, 두 번째 입장들이 논의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분법적 구도 (남성=전사, 여성=피해자/평화만드는자)를 넘어서서, 전대

와 군사주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표현되는 젠더 관계를 규명한다.

인로(Enloe)는 국제관계나 사회에서 국제정치학은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전쟁담론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력을 강화시키며, 여성을 패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성들이 군사주의, 제국주의가 유지하는 기본적인 태도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고 있다. 성별화된 군사화를 규명하는 작업들은 안보에 관하여 무엇이 얘기되고 있는가¹²⁾,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전쟁담론이 계속알리티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¹³⁾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전쟁이나 군사주의와 같은 평화문제가 여성과 경험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대 여성학파에서 2000년도부터 군사주의, 군대에 관한 논문들이 매년 배출되는데, 이러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의 분석과 인식의 틀은 제공해주나, 이러한 연구가 실질적인 평화운동과 관련해서 어떠한 문동적 이슈를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접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탈군사화를 위하여: 안보개념의 새로운 정립

부시가 아프간 침략을 선언했을 때, 일부 군사전문가는 소련의 아프간 침략 실패를 전례삼아 전쟁 승리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의 지형과 날씨, 제릴라식 전투훈련으로 다져진 병사들의 특수성이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한가지 계산하지 않은 것은 소련이 침공하면 시집보다 훨씬 성능 좋은 최신 무기들이 미국의 최대 군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여실히 보여졌다. 사실,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곳에 미국을 최고의 군사기술 자당과 함께 많은 돈을 마구 쏟아 부은 셈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911 사태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았다¹⁴⁾.

테러리즘과의 전쟁은 끝이어서 강대국들에게 대한 경고로 이어졌고, 반테러법 제정, 캐나다 국경

12) 존(Cohn, 1993)은 '사람들이 현실에 관하여 어떻게 얘기하는가'하는 사람들의 사고 표현방식을 추적함으로써 국가안보담론이 성별화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승리과 침묵은 남성성으로 표현되면서 찬양되고 명예롭게 생각되지만, 패배와 동정은 여성성으로 표현되면서 편협했고, 가치 감화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13)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표현하거나 전쟁에 관하여 표현할 때, 그 방식과 용어는 성관계를 연상시킨다. 침략을 강간으로 전쟁을 남성의 성기도, 평화를 위한 전투는 순결을 위한 성관계로 표현한다. 문제는 정복과 승리는 남성다움으로, 패배는 강간당한 여성 또는 수치스럽고 낙약한 여성성으로 표현된다는 데 있다. 자세한 내용은 Nagel의 1998년도 글을 참조하라.

14) 미국 뉴햄프셔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마크 W. 헤일드는 언론에서 발표한, 아프간 전쟁의 사망자 수 중 가장 타당성 있는 조사 수를 3,767명으로 집계하였다. 이 숫자는 911참사로 인해 사망한 3,251명보다 많은 숫자이다. 동아일보 2001년 12월 26일자.

감축, 이민자들의 단속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와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911 사태 이후, 미국 의 안보 핵심은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risk management)에 있고, 이는 냉전시대 패만공이나 핵카시즘의 선봉과 함께 신중질적인 예민함을 동반하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의 경제적 자원 활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경제국가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¹⁵⁾. 그런데 이 무시 행정부의 안보 도모는 여전히 강한 군사력 확보를 기초로 하고 있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여 가상적 적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면서, 미국 중심적인 패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입각하고 있다.

그동안 소위 군사력 중심의 안보가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므로 가난과 경제적 불평등, 생태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과 인식은 고조되어 왔었다. 그리고 누구의 안보인가, 무엇을 위한 안보인가라는 문제 제기는 비군사적 공동안보에 대한 인식도 가져왔다. 1994년 유엔 인간개발보고서에서는 인간안보라는 개념도 등장했다. 안보란 더 이상 군사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정치와 같은 비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어서 집, 직장, 거리,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즉 일상적 삶에서 안보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해석이었다¹⁶⁾. 이제 안보의 문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의 안보,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안보개념으로 바뀌고 있었다(이대훈, 1998).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진정한 인간안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보의 개념에 여성적 사고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어든(Reardon, 1996)은 여성적 사고란 관계성, 협력, 토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남성적 관점과 가치, 양식에 치우친 안보개념에 이러한 여성적 가치, 여성적 사고 양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적 접근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권과 평등,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상호성 고창과 생명보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을 상징하고 적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적대적 관계성이 아닌,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하는 화해와 공존을 위한 방법을 탐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방적 명령과 순종, 획일적 사고가 아닌, 열린 의사소통, 다름에 대한 솔직한 대화,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런데 911 사태 이후, 국제 NGO의 활동가들 사이에서 안보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¹⁷⁾. 국가안보-인간안보라는 틀 속에서 안보개념을 가두지 않고, 국경과 국가를 넘어서서 자유로이 경계를 넘나드는(transversal), 새로운 안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상황에서 인간안보와 같은 개념들이 사회운동의 행위를 주도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개념으로 유효한 가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고 있다.

15) Baker Spring, "Talking Pints: Terrorist Attack on America Confirms the Growing Need for Missile Defense," Backgrounder 2001 September 20.; Francis X. Taylor, "Terrorism: U.S. Policies And Counterterrorism Measures," December 1, 2001.

16) Haq M. "The Advent of the Human Development Report," in Reflections on Human Development. NY: Oxford UP, 1995, 39-43쪽.

17) 이는 영국에서 평화학을 연구하는 이대훈 님이 쓴 ARENA의 워킹 자료이다.

권인숙 (2000), "우리 삼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평화』 창간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편, 서울: 달대

김월리 (2002), "한국의 군사주의와 성: 유교전통, 반공주의, 경제발전주의를 중심으로," 『여성
과 평화』 제2호,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서울: 평화여성.

손덕수 (1990), 『여성평화』 2집,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서울: 여성평화사.

윤필로 (1996), "미국의 국방정책과 군수산업," 『경제와 사회』 겨울호, 통권 32호

이대훈 (1998), 『세계의 화두』, 서울: 개마고원, 제9집.

최장집 (1989), "군사화와 제3세계의 평화," 이호재 편, 『한반도 평화론』, 서울: 법문사.

Brock-Utne B. (1985) *Educating for Peace: A Feminist Perspective*, NY: Pergamon Press.

Chenoy A. M. (1998) "Militarization, Conflicts and Women in South Asia", in L.A. Lorenzen
and J. Turpin, eds., *The Women & War Reader*, NY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Cock J. (1994) "Women and Military: Implications for Demilitarization in the 1990s in South
Africa," *Gender & Society*, 8(2): 152-169.

Cohn C. (1993) "Wars, Wimps, and Women: Taking Gender and Thinking War", in M. Cooke
and 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27-246.

Cohn C. (1998) "Gays in the Military: Texts and Subtexts", in M. Zalewski and J. Parpart,
eds. *The Man Ques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and Colorado: Westview Press. pp:
129-149

Enloe C. (1983) *Does Khaki Become You?: The Militarization of Women's Lives*, London and
Winchester: Pandora.

Enloe C. (1989)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nloe C. (1990) "Bananas, Bases, and Patriarchy", in J. B. Elshtain and S. Tobias, eds.
Women, Militarism, and War: Essays in History, Politics, and Social Theory,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189-206.

Galtung J. (1985) "Military Formations and Social Formations: A Structural Analysis", in P.

Wallensteen, J. Galtung, and C. Portales, eds, *Global Militarization*, Boulder and London: Westview Press, pp: 1-20.

Gillis J.R. (1989) "Introduction," in J.R. Gillis ed., *The Militarization of the Western World*, New Brunswick and London: Rutgers University Press.

Herbert M.S. (1994) "Feminism, Militarism, and Attitudes Toward the Role of Women in the Military," *Feminist Issues*, 14(2): 23-48

Mohammed N. A. L. (1995) "The Development Trap: Militarism,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overty in the South", in G. Tansey, K. Tansey and P. Rogers, eds, *A World Divided: Militarism and Development After the Cold War*,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Ltd., pp: 44-66.

Peach L. J. (1995) "Gender Ideology in the Ethics of Women in Combat", in J. H. Stiehm, ed., *It's Our Military, Too!: Women and The U.S. Milita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p: 156-194.

Reardon B. (1986) *Sexism and The War System*. Ne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Reardon B. (1995) "Women's Visions of Peace: Images of Global Security", in J. Turpin and L. A. Lorentzen, eds, *The Gendered New World Order: Militarism,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 211-235.

Ruddick S. (1989) *Maternal Thinking: Towards a Politics of Peace*, London: The Women's Press.

Sharoni S. (1992) "Every Woman is an Occupied Territory: The Politics of Militarism and Sexism and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Journal of Gender Studies* 1(4):445-462.

Shaw M. (1991) *Post-Military Society: Militarism, Demilitarization and War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Cambridge: Polity Press.

Stiehm J. H. (1988) "The Effect of Myths about Military Women on the Waging of War," in E. Isaksson ed., *Women and the Military System*. New York: Harvester.

Stiehm J. H. (ed.) (1995) *It's Our Military, Too !: Women and The U.S. Militar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Theweleit S. (1993) "The Bomb's Womb and the Genders of War," in M. Cooke and A. Woolla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3.

한국민족주의와 인권

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족’의 이름으로 순결해진 딸들?

주한 미군 범죄와 여성¹⁸⁾

1. 글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1991, 1992년 통두천 두려밤(기지촌 여성운동 단체)에서 일하였고, 그때의 경험을 계기로 1993년 10월에 결성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1990년 겨울,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나는 사회 진로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두려밤 소식지를 보게 되었다. 난생 처음 접하게 된 기지촌 해운 여성의 삶... 학생운동 내내 고민했던 분단과 외국군의 주둔, 가부장제, 빈곤, 노동 문제등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모순이 그들의 삶에 집약되어 있었다. 밤새워 소식지를 읽으면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들의 삶의 굴곡과 고통이 그대로 나에게 파고드는 것만 같았다. 스스로 인생 막장에 왔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 기지촌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했다.

미군 주둔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범죄, 환경 오염, 기지촌 매매촌, 혼혈 아동¹⁹⁾ 등)에 관한 사회 운동 참여 부럽지 못한 한국 사회에서 나의 활동 경험은 언제나 특별한 것으로 ‘대접’받았던 것 같다. 수많은 강연과 인터뷰, 연설, 원고 청탁 등이 능려과는 무관하게 나에게 쏟아졌다. 그때마다 나는 부족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렸다. 의무감에 떠맡은 일이긴 했지만 ‘일심적 반미’를 강조했던 나의 강연은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것이 나에게 위안이 되기도 하였다.

미군 범죄에 관한 일을 6년 넘게 했으면서도 나는 피해자를 상담하는 일이 아직도 부담스럽고

18) 이 글은 1999년 11월 ‘미일의 냉전정체와 종아시아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오키나와에서 열린 제3회 종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를 정리하는 데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어 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김동심, 이소희, 오진아, 마야유치 아키오, 고유경님과 여성과 인권연구회 김은실, 정희진님께 감사 드린다.

19) 오키나와에서는 혼혈아(混血兒)라는 말에 이미 인종적 편견이 담겨 있다 하여 ‘국제아’(國際児)라는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두렵다. 강연이나 원고 역시 마찬가지다. 사석에서도 미군 범죄와 관계된 이야기는 솔직히 피하고 싶을 때가 많다. 물론 신고를 받거나 제보를 잡하면 피해자를 만나고, 경찰서에서 확인 전화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고, 집회를 조직하고, 선전물을 만들고, 재권 투쟁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겠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무언가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범죄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은 미군의 잔인함과 오만함, 한국 정부의 시의성과 무대백, 한미 간 제도의 불명확성을 규탄한다. 미군이 '민약의 군'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미군 철수 구호를 더욱 소리 높여 외친다. 나 역시 그러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가장 소중한 알맹이가 빠진 것 같은, 진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채 겁에끼만 가지고 소리치는 듯한 공허함을 지우기 힘들었다. 왜 늘 허거져 있었을까? 무엇이 채워지지 못한 걸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997년 5월 '군대, 여성, 인권'을 주제로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가했을 때였다. 필리핀, 오키나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의 만남은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 국가가 독점한 군사 안보의 문제 등을 일깨워 주었다. 그때부터 내가 '실천'이라고 여겼던 최소한의 행위들이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지, 그들의 고통을 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강연을 마칠 때면 피해자가 당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쉽게 그들의 얘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였다. 그 공허함의 정체가 무엇이 라는 고통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당혹감. 오직 '반미'의 일념으로 미군범죄 사례를 퍼들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1987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5월과 8월에 집중했던 나의 대학시절 반미 투쟁에 대한 회상. 늦게나마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다는 안도감(?)과 감사함, 앞으로 해야 할 일 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교차하였다. 그 후 미군 범죄에 대한 인터뷰, 강연, 원고 등은 나에게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고통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고역이다.

사람들은 미군 범죄를 '반미'의 문제로 인식하지만 나에게 그것은 '고통'으로 다가온다. 범죄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람의 고통과 만나는 것이고, 고통을 대면한다는 것은 진실과 만나는 일이다.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는 점에서 기쁨이지만 그 고통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분명 피하고 싶은 일이다. 사람들은 고통의 경험이 주는 무게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지도 모른다. 피해자와의 만남이 부담스럽고 그들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은 고통과 직면하는 것 그 자체와 그에 따르는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고통의 소리를 들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소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한 폭력을 '대외'를 앞세워 너무 쉽게 '반미'의 문제로 환원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개인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외로운 시간이 많아졌다.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고통에 닿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의 물부딪음이 나와 똑같은, 살아 있는 인간이 표출하는 감성이라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사회는 미군 범죄를 들추어 제각기

필요한 곳에 '활동'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은 아직 준비되지 못한 것 같다. 집회를 열고, 연설을 하고, 원고를 쓰고, 투쟁을 하는 것과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것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남북은 나의 활동을 두고 주한 미군(미국)과 씨름한 세월이라 말하지만, 나예전 피해자의 고통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폭력·국가주의, 군사주의, 민족 지상주의, 가부장제, 인권을 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 등-과 씨름한 세월이 아니었나 싶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개인의 고통(폭력의 경험)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 '미군 범죄'라는 사안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2. 미군 범죄의 사회적 의미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으로서,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들까지도 희생되었으며,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총선거도 실시되지 못하였다." (1999년 3월 1일 발행, 고등학교 『국사(국헌)』, 196쪽)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때 민주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위 교과서, 207쪽)

"재판권" 사실마저 왜곡한 위의 기록은 현재 남한 사회에서 이 두 사건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제주 4·3은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 과정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5·18 광주민중항쟁은 '폭재 정권과 민주화 운동 집단간의 투쟁'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직도 미국의 개입, 고사(敎唆), 배후 조종과 그로 인한 책임 등은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고사, 배후 조종자로서의 책임론 아니라 미군의 직접적인 살인 행위 역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을 제외하고,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가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군부 정권을 마감하고 민간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다. 1993년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했고, 노근리 사건 역시 1994년 이후에야 수면 위로 떠올랐다.²⁰⁾

50여 년 전 미군의 민간인 학살이 1999년 9월말 AP통신의 노근리 보도 이후에서야 붓물 터지듯 집결된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가짜를 가슴에 품고 수십 년을 살아온 그들은 노근리가 곧론화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말을 해도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20) 노근리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정은용 씨는 당시 사건을 소설했다. 「그때, 우리 아들을 아는가」 [도서관판 다리, 1994]로 옮겨 놓았다. 그는 미군 민병을 언급했다가 혹시 화를 입을지 몰라 문학작품의 형식을 빌어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미군과 연계된 어떠한 것도, 실행 그것이 일정 지역에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은 것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커녕 사실 확인마저 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곁을 더듬어 보면, 산발적으로 개인이 당한 미군 범죄나 혼란 피해 등이 얼마나 사회화되기 어려웠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미군 범죄'는 1992년 10월 이후에 만들어진 '신조어'(新造語)이다. 물론 '미군'과 '범죄'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것이 '미군 범죄'라는 합성어로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고 김학순의 증언이 일본군의 성 노예 문제를 이끌어 내었다면 1992년 10월 동두천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의 죽음은 미군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종교, 여성, 인권, 청년 단체 등 전국의 48개 단체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 사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였다. 이후 1993년 10월 공동대책위원회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라는 사실 조직으로 재탄생하였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식민과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에 빚어지는 불경통한 한·미 관계, 그로 인해 당연시되는 미군범죄 공동화의 일반적 어려움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위에 적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① 냉전 체제 산물로서 존속되는 안보 제일주의, ② 개인의 인권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는 민족 지상주의, ③ 기지촌 패권 여성이 당하는 범죄는 전체 한국인의 피해와 다르다는 안권 차별적 관점, 이 세 가지가 미군 문제 정치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3. 미군 범죄의 공동화·정치화를 방해하는 몇 가지 관점

피해 국민의 인권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다?

"하찮은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함미 무호 관계에 글이 가서는 안 된다."

(1992년 동두천에서 미군에게 살해당한 윤금이 씨 사건 직후, 동두천시 공무원)

"지금 북한에서 잡수함도 내려오고, 말하자면 준전시 상황인데 미군 범죄 가지고 부대 앞에서 시끄럽게 시위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미군을 도와 줘야 한다니까."

(1996년 미군 살인 사건 혐의 집회 신고서를 제출할 때, OO경찰서 형사와 말)

"자주 뭘 알려 달라는 겁니까? 전화로 말할 수 있어요. 어허 그건 '군사 기밀'이라니까."

(1993년 미군 2명의 택시 기사 강도 사건에 대해 질문했을 때 파주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 경찰의 대답)

“미군이 싫으면 북한에 가라, 북한에는 자유도 미군도 없다.”

(1998년 5월, 미군 범죄 근절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하는 금요 집회를 하던 중 미군이 전한 권지에서서)

그 어디에도 외국 군대의 주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곳은 없지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미군이 북한군의 남침을 막아 주어 한반도 전쟁을 억제한다”는 논리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보’라는 말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일차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것에 의문이나 이견을 제시하면 ‘이적 행위자’로 규정되어 사회적으로 배제되기 십상이다. 1998년 추정 예산을 기준으로 남한의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21.3%였다. 국가 예산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여성(부녀) 관련 복지 예산은 2000년 현재 전체 예산의 0.28%에 불과하다.²¹⁾ 1998년 말 전국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이 1만 3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안보란 무엇인가? 국가 예산의 20% 이상이 인간 삶의 질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 쓰이고 있지만, 한국에서 국방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는 몹시 어려운 주제다. 사람들은 안보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지, 안보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마저 빼앗긴 채 국가가 독점한 군사 안보 이데올로기에 갇혀 살아왔다.

물려 들어 벌써 이태원과 의정부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만 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만 6천 904명이었다.²²⁾ 물론 이는 ‘공식’ 통계에 근거한 최소한의 수치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 범죄는 약 10만 건으로 추정된다. 10만 건의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10만 명 이상의 미군 범죄자와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다는 말이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이라는 상식이 그들에게도 통했을까? “북한의 도발로부터 남한을 지켜 주러 왔다”는 미군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하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살인,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가 집중되었던 1945년부터 1967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발효되기 전까지 발생한 범죄는 정부 차원의 기록조차 남아 있지 않다. 너무 오래된 문서는 폐기한다는 것, SOFA가 생기고 나서야 법무부가 미군 범죄 통계를 취급했기 때문에 그 전의 일은 모른다는 것이 외국 군대의 폭력에 대한 정부 답변의 전부이다. 일본에서는 1945년 8월 30일부터 미군 집령 3개월 동안 미군에게 강간당한 여성을 최소 3천 700 명으로 추정한다고 한다.²³⁾ 한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다.

21)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여성복지학보』, 216쪽

22) 법무부 검찰4과 제공, 『韓美行政協定사건 처리현황』(1999년); 외무부 국정감사 자료, 『1967년 韓美行政協定 체결 후 주한미군 범죄 처리결과』(1988년);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도서출판 민, 1995)

23) 루지페 유키, 『冷戰 體制 形成期の 米軍과 性暴力』, 『女性, 戦争, 人權 2』(行路社, 1999)

미군 범죄에 대해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과 1998년 현재 미군인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율이 3.9퍼센트(미군속 재판권 행사율 24.6퍼센트)라는 사실은 미군 범죄를 인식하는 한·미 양국 정부의 태도를 드러낸 일례이다.²⁴⁾

정부는 늘 ‘안보’를 제1순위로 떠받들어 왔지만 정작 10만 명이 넘는 미군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은 외면하였고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돌보지않는 무대책은 개인의 생명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강화시켰다. 그 결과 외국 군대의 폭력은 계속해서 은폐되었고, 미군범죄 피해자는 대한민국 성원이 아닌 것처럼 소외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고통과 경험은 전혀 사회화되지 못했다. 언제나 인공은 국가 ‘안보’에 밀려나 있었다.

별태에서 미군에게 강간당한 후 총살당한 여성(1957년 경기 파주), 딸과 어머니가 한자리에서 강간당한 사건(1969년 충남 서천), 미군이 조종하는 군견에 온 몸을 물어뜯기고 폭행당한 농부(1962년 경기 권북), 미 공군 폭격기의 오폭탄에 맞아 즉사한 민작의 여인(1969년 경기 화성, 이 사건은 여인의 남편이 미군 부대 경비원으로 취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부대에 일지리를 구한 남편은 술로 세월을 보내다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쳤다), 탐 스피리트 훈련 나온 미군들에게 임신한 채 윤간당한 후 여권의 죽음을 담은 여성(1986년 충북 제천), 미군에게 목이 잘려 숨진 여성(1996년 경기 동두천), 살해당한 후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여성(1998년 경기 의정부), 정신을 팔아 쫓린 상태로 장문 속에서 발견된 여성(98년 전북 군산), 전깃줄로 목이 졸려 숨진 여성(1999년 동두천), 심한 구타로 갈비뼈가 모두 부러져 숨진 68세 여성(2000년 의정부)…… 아무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이 국가 안보만이 살길이라는 담론속에 범죄 사실도 알려지지 않은 채 흔적없이 사라져 갔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와 미군의 비협조로 미제로 남은 사건도 수두룩하다.

범죄 발생은 순간의 일이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평생을 상처와 고통 속에 살아간다. 또한 가치 인간 주민들은 그들 자신도 언제든 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미군 범죄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불신과 패배감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피해자가 단순히 구속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라는 것, 즉 모든 사람이 학문 연구, 예술 활동, 일상의 언어 생활 등에서 무의식중에 자신의 말에 대해 조심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식을 감열해 보는 수렁 제국이 불가능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미군 범죄의 영향은 통계 수치상으로 정리된 몇 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상과 이 땅으로 충성을 다하여 피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우리가 초등학교때 시 도 때도 없이 불러 왔던, 지금도 방송 마당 시간마다 울려 대는 애국가란 국가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 피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고 세뇌하는 국가 권력은 개인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국가의 정당성을 움직일 수 없는 진리로 받아들일

24) 법무부 검찰4과 제공, 「韓美行政協定 사건 처리현황」(1999년)

것을 강요하는 국가주의 이념은²⁵⁾ 미군 범죄를 미군이 주범하는 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당연한' 현실로 간주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가(민족)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한다는 교육은 수없이 받아 왔지만 그 국가가 정작 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듣지 못했다. 민족을 구성하는 개인,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배우지 못했다.

미군 폭력으로 민산의 아내를 잃은 남편, 미군에게 감금당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여성, 미군속 아들이 영화 흥내 내며 뽀빠 할애 맞아 숨진 아들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 미군 강도가 휘두른 칼에 목을 다쳐 노동력을 상실한 택시 기사가 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국가는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해려왔는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폭인·발조하는 국가의 폭력과 그저 내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삼는 우리의 무감성은 어떻게 합리화되고 있는가? '국가의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당하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다. 사회 안보, 인간 안보, 문화 안보는 건데 오히려 국가가 독점하는 군사 안보만이 안보의 모든 것인 양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무기는 만들어질 때 이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고 한다. 무기를 만들어 인명을 살상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자원 배분 과정에서 사람이 소외되기 때문이다. 미군 살인 사건을 두고 IMF 이전에는 국가 안보 문헌(남북 대치 심층에서 미군의 사소한 잘못은 덮어 주어야 한다) 하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IMF 이후에는 경제 안보(돈을 꾸려면 미국에게 잘 보여야 한다)를 들먹인다. 그 어디에도 사람의 자리는 없다. 살아 움직이는 '구체적인' 사람, 개인의 안전이 온전히 보장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국가는, 군대는 개인의 고통을 지켜줄 수 있는가? 총과 칼로 무장한 외국 군대에 의존해 온 군사 안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간 안보'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적으로 배려되지 않는 '안보'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국가 기관의 폭력을 상징하는 언어로 남을 수밖에 없다.

"많은 본질적으로 기본 단위인 '하나'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기본 단위인 '하나'가 담고 있는 질의 문제를 제쳐놓기 때문에 '정신대' 여성 한 사람이 집어쳐야 했던 민족의 문명, 가깝게는 '남한 모델'이 성립되기까지 노동자 개개인이 치러야 했던 희생도 쉽게 잊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송두율의 지적²⁶⁾은 국가나 민족 문제에 치중되었던 우리의 인식을 개인의 복지나 행복, 삶에 대한 가치의 평가 등으로 새롭게 일깨우고 있다.

식민과 분단, 군사 폭력으로 얼룩졌던 한국 사회는 '이것(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재깃(북한)'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합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 속에서 개인의 삶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희생되어 왔다. 마치 개인 인권을 말하면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것인 양,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을 하면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인 양 해석되었다.

25) 문부식,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 - 광기와 사태를 생각함」, 『당대비평』 1999년 겨울호, 234쪽.

26) 송두율, 「기적과 환상 : '남한모델'의 제음미」, 『21세기와의 대화』 (한겨레신문사, 1998), 85쪽.

미군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한 강조는 '통일 운동' 집단으로부터 민족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피해자 인권 운동이 제국주의의 문제를 간과하게 하여 결국 미국만 이롭게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계급과 민족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운동 집단에서 성(性, gender)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 운동을 "운동의 본질을 초월한다"고 말했던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여성 운동은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는 비난을 수없이 받아 왔다. 이처럼 국가보안법을 빼앗은 이분법과 개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습관은 한국인 전체 문제와 구별되는, 이질적인 조건들을 갖고 있는 개인(여성, 노인, 장애인, 아픈 등)의 문제를 휩쓸어가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²⁷⁾ 그것은 획일주의와 독선으로 구체화되지만 '국가와 민족', '전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고통에 대한 침묵을 합리화한다.

미군 문제는 개인의 고통보다는 민족 주권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담론은 주로 정부 관계자나 냉전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진다. 반면 개인의 인권보다 민족 주권을 우선시하는 언설은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운동 집단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윤금이 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1992년 10월 이후부터 전개된 '미군범죄 근절운동'의 경우 국제 연대는 활발했지만 국내 반미 운동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민족주의 운동 진영의 주된 구호는 '미군 철수', '미군 기지 반환' 등이다. 반미 운동을 집권하는 방식에서 '범죄 근절'과 '미군 철수, 기지 반환', 이 두 가지는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것은 고민의 출발점이 다른 논외이다.

전자가 개인의 일상적 삶과 권리, 고통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후자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선 민족, 국가의 문제를 제기한다. 당연히 실천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미군이 주한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범죄, 환경 오염, 훈련 피해, 매매춘, 혼혈아 등)의 해결과 피해자 지원과 연대,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에 운동의 초점을 맞춘다. 미군 주둔으로 인하여 구체적 개인이 겪는 고통에 호소하고, 미군 주둔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내려 노력한다. 반면 후자의 행동 양식은 다분히 담위적(혹은 선언적)이며, 전략과 전술이 혼재된 정치적 언설일 경우가 많다. 담위적, 선언적 언설은 구체적 실천을 담아 내기 어렵다. 그렇

27) 김은실, 「폭력과 여성」,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제주4.3 제50주년 제2회 동아시아평화와 인권 국제학술회의 보고서』 (역사비평사, 제주4.3연구소 역음, 1999), 182쪽.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그것 자체로는 지향적이고 긍정적이며 권보적인 가치/규범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광범적 승인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민족 혹은 가족과 같은 집단의 규범이나 사회적 장자의 지배 가치들과 정합하게 되면 인권의 구체적 실천은 사회적 혹은 문화적 관행속에서 사소하고, 유보될 수 있는 부차적인 문제로 사라져 버린다." - 김은실, 「여성인권과 문화」, 『제17차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주최, 2000년)

기에 일상적 접근보다는 거시적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남한에서 해방과 분단의 문제, 통일 관련 언설이 가시화되는 8월에 집중하는 운동일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보다는 정세 변화에 의존한 투쟁이 대부분이다. 그들의 언설에는 '구체적 개인'으로서 한국인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민족'이 존재할 뿐이다.

물론 전자와 후자의 논리나 행동은 미군 관련 운동이 열악한 한국 사회에서 서로 뒤섞이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상호 보완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반미 운동은 활동의 내용과 관계없이 국가 권력의 정치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범죄진실운동본부'라고 새겨진 명함을 내밀면 '네가(너같이 어린 애가) 정쟁을 하느냐, 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 된다. 국군도 문제 많은데 왜 하필 미군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서부터, "좋은 일 한다. 진작부터 이런 미가 있었어야 했다. 우리 나라에 언제부터 이런 단체가 생겼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 "미군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사람, 심지어 "너무 무섭다"는 사람까지 여러 반응과 만나게 된다. 반미 년이 넘는 미국의 지배와 분단, 독재 군사 정권의 체합은 미군에 대한 복합적인 생각을 형성하였다. 이는 또한 미군의 장기 주둔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 운동과 학계의 연구, 교육의 무재와도 연결된다.

미군 철수를 중심 구호로 삼는 민족주의 운동 집단에서는 '미군 범죄 근절' 운동을 하는 단체에 "개량적이다. 그렇다면 미군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이냐,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백날 범죄 근절 되쳐 봐야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 인권과 민족 주권은 대립되는 것인가? 개인이 '하나'라면 민족은 '그 하나를 포함한 열'과 같은 것인데, 과연 양자 택일이 가능한 것일까? 열을 위해서 하나는 무시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미군 철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삶의 평화를 지키는 운동이 미군 철수 운동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미군 범죄 근절'의 구호가 피해자 인권에 대한 제기로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것이냐, 개량적이다" 하는 식으로 비난받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민족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이분법적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소위 '거대 담론', '구조'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운동에 동급을 매기면서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위계적 사고이다. 나는 개인이 당하는 고통을 구조의 부산을 정도로 치부하는 인식은 '사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민과 성찰 없음으로 인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민족 주권의 문제냐, 개인 인권의 문제냐' 하는 분리된 문제 설정 방식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인간에게 가해지는 폭력, 그 본질에 대한 접근을 방해할 뿐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992년 10월 미군에게 살해된 윤금기 씨는 기지촌에서 미군에게 성을 파는 때론 여성이었다. 생전에 그녀는 '암색시'(미군에게 불을 파는 어려운 여자)라는 불발매질을 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미군 처벌과 관련된 대통령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관급이 누이, 순결한 민족의 딸’로 둔갑한다. 살아서는 천하다고 멸시받던 여성이 ‘양키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후에는 ‘우리의 누이, 순결한 조선의 처녀’가 된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이중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공유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권을 수단화하는 문화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처벌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평화 운동의 한 과정으로서의 ‘반미’가 아니라 반미 이데올로기를 극대화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에 피해자가 겪었던 고통이나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폭력성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윤금이 한재 고통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 미군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그가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되었다는 것’만이 ‘외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미 인권이 도구화되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무엇을 통해서든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본질이 될 수 없다²⁸⁾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한다.

범죄를 당한 사람이 있을 중독자든, 매춘 여성이든, 동성애자든 무슨 상관인가? 인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 아닌가? 왜 피해자는 ‘순결’해야만 하는가? (이는 ‘정신대’ 문제를 설명할 때, 일본군이 순결한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다, 그들이 군표를 만기도 했지만 매춘여성들은 아니었다는 논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피해자의 인권과 그가 겪었을 고통보다 가해자가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미군이었다는 점에 주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이 당한 폭력’을 ‘민족의 유린’으로 환원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들은 범죄의 피해를 ‘고통’보다는 ‘수치’의 문제로 접근한다. 민족의 자존심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성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범죄를 당한 사람이 별다른 ‘결함’이 없는, 아무 ‘죄’도 없는 ‘순수한 희생자’이어야 의식에 심쳐 입은 민족 주권을 설명하는 데 더욱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²⁹⁾ 이러한 태도는 이후 다른 종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한 논리 전개로 이어졌다.³⁰⁾

28) “폭력의 위험설은, 심지어 그 폭력이 단기적인 목표라는 극단적이지 않은 틀거리 내에서 의식적으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항상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목표가 재빨리 달성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피해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폭력 실천을 정치적 견제로 확산시킬 것이다. 행동은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폐쇄하는 경우 현상태로의 복귀도 항상 불가능할 것 같다. 폭력의 실천은, 모든 행동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변화시키지만, 더 폭력적인 세계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많다.”(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123쪽)

29) 이에 대해서는 정희진,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여성헌법성운동사(1986~1998)」, 한국여성정치화면합의,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1999)를 참조.

30) 1999년 10월 노근리 사건의 피해 유가족은 “노근리 문제가 반미 운동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말과 함께 양심 선언을 한 미군과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이를 두고 한 통일 운동가는 “어떻게 미군과 화해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냐, 반미의 문제로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잘못도 안 된다”라는 비난을 하였다. AP통신 보도 전까지 노근리 유족들은 양민 학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정부로부터 “너희는 빨갱이다. 계속 그 일을 하면 삼 대가 망할 줄 알아라”는 등 온갖 탄압에 시달려 왔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 중에서 미군 주둔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미군 철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둔다. 그러므로 미군 범죄 피해는 친미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근거, 미군 철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전 사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미군만 철수하면 된다. 미군 철수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미군 철수의 시기, 방법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들이 주문하는 동안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혹시 그 말은 미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잘못된 제국주의 미군과 이를 비호한 정부측에 있으므로 '문통권'은 아무 책임도 없고 오로지 미군을 규탄하는 목소리만 내면 된다는 말은 아니냐고.

그러나 원칙적 선언만으로 운동의 '대의'가 확보되지는 않는다. '선언'이 빛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아무 지원(연대)도 하지 않으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실행 철수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도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 '미군만 철수하면 된다'는 선언은 아사 적전의 사람에게 음식을 전네지는 않으면서 자본주의가 망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것은 전혀 고통받는 이가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답변이며,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흔히 '구조(제도)만 바뀌면 된다. 그것이 우선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대부분 이러한 인식은 인권을 경시하는 태도와 맞물려 있다. 구조가 개선되기까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문제로(혹은 후에 저절로 해결될 문제로) 여기게 만든다.

반면 미군 폭력으로 자식을 잃고, 단지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차별받고, 장애인 전용 도로가 없어 단 한 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고 '순결'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성 멸시받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내가 그 고통 한가운데 있다면), 구조만 바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미 철저히 타자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나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가슴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 운동에 서열을 매긴 말들이 가능한 것이다.

인간에게 가해지는 현재의 폭력에 눈을 감으면 결국 눈이 먼 미래를 맞게 된다. 미군이 철수하고 통일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 '진실'이 되려면 지금의 여성 운동이나 장애인 운동, 미군 범죄 피해자 인권 운동, 동성애자 인권 운동 등 소수자의 운동이 미군 철수나 통일 운동만큼

오죽하면 사건의 자료가 된 대선 소천으로서 노근리를 세상에 알렸겠는가! AP통신의 특종이 있기 전 『한겨레』와 월간 『말』 등에서도 이미 '노근리'는 여러 번 소개되었다. 유족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에 탄원서를 낸 것만도 열 차례가 넘는다. 수십 년간 계속된 그들의 호소에 연대하지도 않았으면서, '노근리'를 '반미'의 문제보단 환원하고, 유족들이 이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노근리 유족들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미군의 양면 학살은 민족 문제이면서 동시에 그들 개인이 당한 인권 침해의 문제이다.

존중되어야 한다. 후에 만들어질 제도라는 것도 현재의 고민과 성찰, 문제 의식 없이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미래의 변화는 현재의 소망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의 변화가 만민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현재 소수자의 존재가 태워져야만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군의 폭력으로 당장이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미군만 철수하면 된다'고 답하는 담위적 선언은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가 아니다. 미래가 현재의 속직업을 생각할 때 나중에 행복해질 거라는 말처럼 무의미한 말도 없다. 그것은 현실의 문제를 도피시키는 수단일 뿐이다. 현재 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는 태도가 운동의 순서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이다.

'암공주'에서 '민족의 말'로 둔갑하는 논리는 개인의 인권이 국가와 민족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미군 철수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또다른 얼굴의 '폭력'(가부장제, 인권을 부정의 도구로 삼는 것,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광각하게 할 뿐 아니라 정당화시키기도 한다. 미군 범죄가 어느 정도 공론화되자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운동 집단에서 "범죄는 할 만큼 했다. 이런 더 큰 이슈(미군 철수, 기지 반환)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쉽게 제기했던 것이 바로 그 예이다. 미군 범죄로 인한 인권 침해는 사소한 문제이고, 미군 철수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문제라는 분리적·대립적 사고가 적용되고 있다.

분단과 외국군의 장기 주둔으로 인한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기지촌 태춘 여성과 우함 미군 제7공군 쿠니 사격장(Koon-mi Range, 전투기 폭격 연습장)³¹⁾이 위치한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대항리 주민들이라고 생각한다. 미군과 한국인에게 이중으로 원시받는 태춘 여성과 1951년 폭격 연습장이 들어선 후 밤낮 없이 날아드는 전투기 제곱 비행과 폭격 소음으로 난청, 두통, 호흡 곤란 등에 시달리며 오복의 불안 속에 살고 있는 대항리 주민들은 미군 주둔의 최대 피해자이다.³²⁾

민족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미군을 남한 사회의 '악(惡)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

31) "미7공군의 쿠니 사격장은 1951년 겨울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1988년 당시 폭격 연습 책임자였던 C.W. 런던슨 소령은 "주위에 높은 산이 없고 한계 끼는 날이 드물어 항상 폭격 연습이 가능하고, 바다와 육지를 연결한 폭탄 공계 연습을 할 수 있어 아시아 공군 사격장으로는 최격지다"라고 「한겨레」(1988년 7월 7일자)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오키나와, 필리핀, 캄, 태국 등지에서 발진(發進)한 미 공군기들도 이 곳 폭격장을 사용하고 있다.(강성철, 「주한미군」 [도서출판 일송경, 1988], 67쪽)

32) 미 공군은 날씨가 매우 흐린 날을 제외하고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약 7백 회 가량 사격·폭탄 투하 연습을 하고 있다. "최첨단 전투기들의 폭음으로 텔레비전 시청과 전화 난청은 물론 열 사람과 대화마저 할 수 없는 병어리 아닌 병어리, 귀머거리 아닌 귀머거리 같은 생활을 해야 하고, 문만을 앞둔 산로들은 아기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해야 하고, 폭음으로 인하여 모든 생활이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고, 어린 애기들이 놀라 자지러질 때는 들뜬매질을 해서라도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싶을 만큼 울화가 치마는 극한 심정을 실제 겪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리라……"(1988년 6월 대항리 청년회에서 발행한 「주민에게 드리는 글」 중에서)

군 철수' 운동에서 기지촌 태촌 여성이나 100dB(주거 지역 환경 소음 기준치는 낮 55dB, 밤 45dB 이다)이 넘는 폭음에 시달리는 태항리 주민들의 문제는 소외된다. 고통받는 집단의 문제를 외면한 운동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무시한 방법으로 진실에 닿을 수 있는가? 고통을 해지한 언어와 행동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미군 문제를 거론할 때 '고통'에 대한 강조는 남성 중심적 민족주의 운동 집단으로부터 '감정적이다. 민족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지 마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에서만 아니라 오키나와나 필리핀 등 미군 폭력을 둘러싼 투쟁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있다. 나는 인간의 구체적 감정에서 진실이 나온다고 믿는다. 그들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소중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쉽게 수단화하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사람이 겪는 '과정'을 간파하는 폭력이 생기는 것이다. 고통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그저 있을 수 있는 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무심한 감정이 나는 무섭다. 인간을 짓밟는 폭력에 분노하지 않는 운동은 새로운 폭력을 구성하는 위험에 가자어 있기 때문이다.³³⁾ 삶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태도는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 정서를 만든다. 고통을 방치하는 데 익숙한 사회 운동 역사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나는 개인의 감정과 의지, 그의 존엄성과 가능성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분노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성숙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갈망의 공감아야말로 사람이 사람으로 숨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한 연대의 힘이 아닐까? 변화가 요구되는 모든 문제는 결국 현실을 안고 살아가는, 살아 있는 몸을 가진 한 사람, 한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보장되느냐 마느냐 하는 인권 문제이기 때문이다.³⁴⁾

미군 주둔 지역 태촌 여성에 대한 범죄는 한국인 전체 피해와 구별된다?

사람보다 '국가(군사) 안보'나 '민족 주권'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의 기저에는 '미군 범죄' 자체가 한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미군 범죄는 '기지촌'만의 문제, 기지촌 사람들이 주로 당한다는 사고와 연관이 있다. 기지촌(基地村), 사전에는 '외국군 기지 주변에서,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상행위 따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의 동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지촌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그리 단순하지 않다. '두려움'(기지촌 여성 운동 단체)에서 일할 때 들은 이야기를 적어 보겠다.

33) '감정의 부재는 합리성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조장하지도 않는다. '참을 수 없는 비극'에 비추어 볼 때 '초면함과 냉정함'이 오히려 '두려움' 것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통제와 결과가 아니라 이해력 결핍의 명백한 징후인 경우에 그렇다.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우선 '감동'해야만 하며, 감동적인 것의 대립물은, 어떤 의미에서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감동에 대한 무감성'으로서, 대개 병리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감상으로서, 느낌의 도 착이다.' <한나 아렌트, 『폭력의 세계』 [이후, 1999년], 101쪽)

34) 다케시마 사요코, 「여성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인권」,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보고서』 (제주4.3연구소 연설, 역사비평사, 1999년), 181쪽.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근처 대도시에서 전문대학을 다닌 청년은 잠이 어디나고 사람들이 풀으면 ‘몽두천’이라는 사실이 너무 참피해서 ‘현두동’이라고 거꾸로 말한다고 했다. 또 30대 여성은 과거에 자신이 실연당한 것이 당연하다고 하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모님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도 똥두천이요” 하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다. 기지촌에서 사는 것이 실연당할 수 있는 주요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 한국인에게 기지촌은 복잡하게 다가온다.

기지촌을 유쾌한 느낌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곳이 왠지 칙칙하고 어두운 곳, 숨기고 싶은 곳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외국 군인을 상대로 성을 파는 한국 여성이 집단으로 거꾸행한다는, 부정하고 싶은 현실 때문이다. 왜, 무엇을 부정하고 싶은 것일까? 남성들은 기지촌에서 여성들이 외국 군인에게 성을 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존재를 수치스러워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남성의 성적 욕구는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를 해결해 줄 때쯤 여성의 존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여성이 외국 군대에 성을 파는 것은 ‘민족의 도덕성 상실’을 뜻하므로 꾸짖려야 할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 문동환은 “우리 민족의 힘이 모자라 미군 기지 주변에 매춘 여성이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러한 불가항력 구조 속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대신 그 일을 해준 여성들에게 미안할 마음을 갖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라고 지적한다.³⁵⁾ 나는 매춘이 ‘필요악’이라는 입장엔 반대하지만 이 말은 ‘어쩔 수 없는 피해자’라면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지촌 매춘 여성을 가리키는 말 중에 ‘암색시’, ‘왕갈보’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갈보’는 ‘냄새 나는 더러운 병레(빈대)’라는 뜻이다. 기지촌의 문제는 곧 기지촌 매춘 여성의 문제를 의미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스스로 매춘을 선택한 더러운 여자들’이라는 낙인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논리(국가 안보 제일주의와 민족 지상주의)를 가능케 한다. 미군 범죄가 교수나 기업체 사장, 대학원, 가정 주부, 유치원생, 노동자, 농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 문제였다면 아마 다른 식의 접근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강력 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이 기지촌 매춘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도 주민들도 모른 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정하고 싶은 집단이 알고 있는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사람들이 미군 범죄를 ‘기지촌 사람들(매춘 여성)의 문제’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천시받는 집단의 문제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쉽게 주변화되고 만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 ‘값’은 성, 계급, 종교, 인종 등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다음의 민경을 보자.

35) 문동환, ‘이중문화 가정폭력 전국연합회 제10회 수련회’(뉴욕) 주제 강연,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 중에서, (1999년 8월 5일)



PHILIPPINE DAILY INQUIRER(1998년
9월 13일자 만평 「OPINION」)

1999년 5월 27일, 미군의 필리핀 진출을 다시 허용하는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 VFA)이 필리핀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만평은 작년 필리핀 국민들의 VFA 승인 반대 투쟁이 한창일 때 필리핀 일간지에 실린 것이다. 필리핀 민중을 상징하는 남자 아이가 핵무기와 방문군협정을 틀어미는 미국인을 향해 힘겹게 대항하고 있는데, 화장을 칠해 한 여자(매춘 여성을 암시)는 미국인의 공무니를 붙잡고 있다. 요란한 복장을 한 여자는 미국편에 있는 듯 그려지고 있다.

문제 의식 없이 이 만평을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리핀 매춘 여성이 진실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미군이 다시 진출해서 그들을 상대로 그녀들의 삶을 파는 것? 여성들은 진정 미군의 주둔을 바라고 있는가? 성을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생계가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면? 필리핀에서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 누가 진짜 미군 주둔을 원하고 있는가?

이 만평은 현상을 드러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왜곡된 껍데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지려면, 이 그림의 내용은 달라져야 한다. 그녀를 미국인의 관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절대적 빈곤이나 이중적 성 윤리를 앞세운 가부장제의 폭력, 매매춘 사업으로 이익을 보는 다양한 집단, 매매춘을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군산 복합체, 군사문화 등이 그녀의 뒤에서 열심히 그녀를 밀어주는 것으로 그려져야 한다. 그것이 아니면 여성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방문군협정(VFA)을 승인할 준비를 갖춘 필리핀 상원이 있어야 한다.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민중이라면 말이다. 이 만평은 피곤한 젊은 남성들을 위해, 군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춘 여성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면서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힘없는 집단을 미련로 몰아가는 이중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인신매매가 판을 치는 문화 속에 이리저리 팔려 온 여성들, 아버지(미군) 없는 혼혈 아이를 떠맡은 여성들, 빈곤에 시달리는 여성들, 기지 환경 오염이 목숨을 위협해도 차마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여성들, 성폭력과 각종 질병에 부양비로 노출된 여성들, 권세를 손가락질 속에 살아야 하는 여성들…… 필리핀에 존재하는 온갖 모순을 떠안은 그녀의 모습은 미군이 좋아 요란하게 치장하고 그의 공무니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한 가지, 그녀가 매춘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혐의' 때문에 피해자인 그녀가 오히려 미국인 관에 있는 가해자처럼 그려진 것이다. 그

너들의 '자발적 선택'은 과연 진실에 가깝는가? 여성 혐오(misogyny)를 전제로 그려진 만평을 보는 순간 나는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가해지는 일상적 폭력에 공포감마저 느꼈다.

이 만평은 단지 필리핀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미를 갖는다. 기지촌에서 태춘을 하거나 미군과 어울리는 여성을 부르는 한국의 '양(洋)덕시'라는 표현과 미군을 남자 친구로 삼을 섹스로까지 주변에 보여드는 여성들을 가리키는 '아메온나(アメオンナ)'는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들이다. 양(洋)과 아메(アメ)가 모두 미국을 뜻하는 말이고, '섹시'나 '온나(おんな)'는 여성을 비하하는 말로 사용된 단어다. 미국 군대에 성(性)을 파는 여성을 '미국 여자(년)'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민족의 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말이다. '순결'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민족의 성원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관순 '누나'라는 말처럼 민족의 주체가 남성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들이 왜 성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는 알려고 들지 않는다. 지금도 기지촌 미군 전용 업소 문 앞에는 '내국인 출입 금지', '여종업원 구함'이라는 팻말이 나란히 붙어 있다. 업소에는 여성들이 일하고 있다. 즉, 여성은 '국민'이 아닌 것이다. 또한 태춘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이 아니라도 여성은 누구나 업소 출입이 가능하지만 남성은 제지를 받는다. 언젠가, 누구든 여성은 외국 군인의 태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³⁶⁾

"사실 기지촌에 있는 여자들 말야, 그 여자들은 이미 그런 것 각오하고 거기까지 간 것 아닌가? 범죄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말야." (기지촌 태춘 여성 살해 사건 직후 경찰의 말)

"우리도 초등학교이 미군한테 성폭행 당했으면 오키나와처럼 시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태춘 여성이 당하는 범죄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떠들지 않는 거지요."

(태춘 여성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여론이 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한 국회의원의 말)

"경찰에 신고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지 모르겠어요. 못 믿겠어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원래 체녀였다고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미군하고 왜 어울려 다녔느냐, 거짓말하면 부녀 보호소에 보내겠다, 협박까지 했어요. 온 몸에 피멍이 들고 고막까지 터졌는데 제가 얼마나 맞았는지 물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미군에게 폭행당한 피해자 증언. 경찰서에서 수사관에게 당한 성폭력을 설명하며)

미군 범죄와 여성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치는 벽이 '태춘 여성, 소위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편견이다. 남녀에게 이중적인 성 윤리가 당연하게 적용되는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공생 벌레를 짊어지게 된다. 그들의 상처만큼 깊고 길건 것이 '순결'하지 않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36) 정유진, 「평화를 만든다는 것」, 『제주인권학술회의 2000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주회), 2000년, 394쪽.

후리 길은 차별이다. 기지촌 여자들은 범죄를 당해도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제 발로 그 길을 선택한 것 아니냐, (결국 그 여자들이 문제다), 때론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자발적으로 때론 집단에 들어간 여성과 폭력의 '순수한' 희생자인 초등학생의 인권의 '길'은 다른 것이다), 원래 처녀가 아니었는데 (이미 여자의 가치를 상실했는데) 미군 폭력 파위가 두어 그리 중요하나, 미군 풀라고 어울리는 여자들이 더 문제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다닌 여자, 짧은 치마와 짙은 화장을 한 여자, 기지촌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여자는 피해를 자초한 여자들이므로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논리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다. 미군과 어울렸다는 것, 소위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해도 판단의 식이다. 미군 범죄를 '기지촌에 제 발로 들어간 여자들의 문제'로 단순화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폭력의 작동에 어떠한 일상적 기제가 관련되면서 또다른 폭력을 양산해내는 지 볼 수 없게 만든다. 요즘 기지촌 때때론 밀집 지역에서는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무도 '순결'하지도 않은, 가난한 외국인 여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순결'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차별했던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된다. 이중적 성 문법을 내세우는 가부장제의 시선은 힘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억압하는 차별의 잣대로 재등장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을 주제로 삼은 올리버 스톤의 영화 「하늘과 땅」(Heaven and Earth)에서 위대를 알본 미군 병사가 때론 여성이 아닌 여성을 베트남의 한 가정의 일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큰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장면이 있다. 그들은 미국에 부인이 있기 때문에 성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은 때론 여성을 살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지긋지긋한 전쟁을 벗어나면서 고향에 가게 전에 '추억거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한' 베트남 여성을 사야 한다고 미군들은 강변한다. 그들이 자기 누이나 어머니, 아내를 '하룻밤의 추억거리'로 시려고 생각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차별주의나 인종주의 폭력은 이미 대상화된 약소국 베트남에서는 쉽게 자행된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그곳 여성들을 강간했고, 국내외를 넘나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베트남과 우르라이 등 원양 어선이 달는 곳 어디에서든 현지 여성들을 쉽게 사고, 여성이 임신하는 순간 버리는 것에 익숙한 한국 남성들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그들이 돈으로 사는 여성을 '노란 변기'(Yellow Stool)라 불렀다. 미군이 한국에서 '섹시'라는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군사주의와 폭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깊이 공생하고 있고 뒤섞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미군 범죄를 '순결하지 못한 여성 집단'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폭력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인권에 차별의 잣대를 들이대는 또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폭력의 사슬을 은폐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력을 재생산한다. 나는 이러한 폭력의 학습이아말로 우리 삶의 편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코소보에 공화유지군이 들어선 후, 코소보 알바니아계에 의해 세르비아계 주민들과 집시들에게 행해진 살인과

방화 등의 행위는 폭력의 학습과 경험, 재성산에 빚어내는 비극을 보여 주고 있다. 폭력을 보았다는 것, 그것에 침묵했다는 것은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침묵없는 경험은 또다른 폭력을 낳는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4. 미군 문제를 왜 인권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나는 위에서 소개한 세 가지 관점을 통해 미군 주둔의 문제를 국제 관계나 정치, 안보 논리가 아닌 구체적인 사람들의 삶의 문제로 제기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군사주의나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개인의 생활을 통한 일상적 정치 문용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인식의 전환과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저항이 공유될 때 연대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나는 미군 범죄 피해자의 상처와 만나면서, 기지 환경 오염 실상을 보면서 개인의 삶이 '국가 안보와 민족 주권'이라는 허울 아래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되어 왔는지, 군사력에 의존한 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반경화적인 것인지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의 고통에 침묵하는 '안보와 주권'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정형화된 사고의 틀은 성장하고 비전하는 통로를 막아 서고 있으며, 약자를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사회적 습관은 구조적 폭력을 양산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누군가를 타자화하며 억압하는 문화 속에서 참다운 해방과 평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요한 갈통(Johan Galtung)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폭력을 줄이고 폭력에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폭력이란 인간의 정신적·육체적 가능성의 실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는 평화란 어떤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질단의 노력'을 통한 '지향과 과정'임을 뜻한다.

'평화 정착'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만 나는 평화란 어떤 정치적 격변을 통해 정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만 한정지으면 평화의 폭 넓은 의미를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전쟁이 종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평화헌' 일상 속에서 전쟁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50년 넘게 미공군 폭격 훈련의 불모로 시달리고 있는 태평양 주민들, 교과서에 단일 민족의 우수성을 명시한 나라에서 경성을 권선 속에 살아야 하는 혼혈인, 보험 가입조차 거부당하는 장애인, 때때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빈민,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고 사는 여성…… 이들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

왜 개인의 인권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여러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나는 "한 사람의 삶의 평화가 깨졌을 때, 그와 함께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누구나 저마다 살아온 길이 다르듯 개인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나 삶의 상처 또한 다르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정체성이 다름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차이를 '민족(천제)'이라는 단

일 잘못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한 태도는 폭력의 다양성과 폭력의 사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는 방안 또한 내놓을 수 없다.

인간으로서 가능성이 파괴되었을 때의 고통, 상실된 가능성의 가치를 누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던 말인가? 죽음은 정신과 육체가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이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가능성을 잃었다는 것은 죽음과 가짜이 있음을 뜻한다. 고통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잊아간다. 개인의 고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개인이 민족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 사람을 하찮게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모여 구성된 민족이라는 것도 보잘것없는 것이 된다. 한 사람이 갖는 생명의 의미를 깨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노근리' 문제와는 달리 한국군의 베트남 일민 학살 등 타민족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폭력의 문제에 무관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을 간과하는 민족주의는 초라할 뿐 아니라 인간을 쉽게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내가 이 글에서 바란 것은 미군 문제를 '민족 주권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인권을 도구화하는 폭력과 사회 운동에 서열을 매기면서 인권을 부산물로 취급하는 위계적 사고 체계이다. 나는 평화란 개인의 인권을 증시하고, 인간의 삶에 고통을 주는 폭력에 못 견뎌하는 실상이 실속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감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다.

평화는 인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고 진실은 구체성에서 나온다. 사람의 고통을 외면한 채 추상적 관념에 역설하는 방식의 사회 운동은 더 이상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수 없다. 사람의 얼굴이 있는 운동만이 승리할 수 있다. 개인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지 않는 한 '변화'란 표명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경험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미군이 단순히 외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세가 현지인들을 타자화하고, 그들을 타자화하는 과정에 폭력이 개입되어 개인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힘이 거세어질 때 더욱 많은 이들의 공감과 연대를 모아 낼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21세기를 평화와 인권의 세기로 지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참여단체 평화운동 사례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위협받는 세계평화, 섬 없는 반전평화운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활동을 중심으로.....

전은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국장)

2001년 9월11일, 지구 반대편에서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다. 세계 무역 센터와 미 펜타곤에 대한 아프간 테러조직의 공격으로 인해 뉴욕과 워싱턴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갔다. 세계 최강국을 지무하는 미국의 중심부가 한순간에 모래탈처럼 무너지는 상황을 전 세계가 목격하였다.

지난 1999년 헤이그평화회의에 참석한 평화운동가들은 끝도 없었던 국가간, 민족간의 무력갈등과 압축한 전쟁의 역사인 20세기를 마감하고 세계는 새 천년의 희망과 평화를 열망하며 '전쟁 없는 21세기'를 다짐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 바깥을 뒤로 하고 세기적 충격에 분노를 담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국의 힘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세기적 충격이었던 9.11 테러사태의 해결과정에서 미국정부는 국제적 심판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무고한 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무력을 통한 보복응징으로 대응하면서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인류의 대참사로 이어졌다.

미국은 테러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그 함'을 무기 삼아 또 다시 그 중심에 섰으며 세계는 미국과 일본없는 테러음침의 보복전쟁에 직간접적인 희생자가 되었다.

테러근절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면서 대대적인 아프간 보복전쟁을 전개했다. 그도 모자라 2002년 초 부시의 연무교서에서는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 범주에 북한을 포함시키면서 한반도를 긴장상태로 몰아갔다.

이에 따라 평화여성회는 뉴욕에서 9.11 테러 참사가 발발하고 이어 테러범과 그 조직을 은닉시키고 있다는 혐의로 미국에 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되자 지체없이 테러 및 전쟁반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미국 부시대통령이 2002년 연무교서에서 '악의 축' 발언을 통해 북한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한반도 전쟁위기 분위기를 조성하게 됨에 따라 평화여성회는 다음과 같은 여성들의 한반도 전쟁 반대 캠페인을 주도하고 나섰다.

1) '평화폭지 날리기' 사이버 캠페인

3,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대미문의 9.11 테러사태는 전 인류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즉시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조직 알 카에다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그들을 은신시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을 준비함으로써 세계는 또다시 전쟁공포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랜 내전으로 피폐한 삶을 꾸려가던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주민들은 일순간에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강대국의 공격 앞에 생계위협과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평화여성회는 9월 15일 대회를 열고 테러 및 미국의 보복전쟁범죄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단체협의회와 대중적인 캠페인 전개를 결의하였다. 대중적인 방정시위 방식으로 사이버캠페인을 결정하고 9월 18일부터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평화폭지날리기 사이버 캠페인에 돌입했다. 평화폭지캠페인은 참가자가 미국정부에 대해 전쟁대신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평화여성회는 그 메시지를 모아 미국정부에 전달하는 새로운 평화운동의 형태였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실명으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장하고 책임적인 운동이 되게 했다. 오마이뉴스가 마련한 평화폭지날리기 코너에는 하루만에 1300여명이 참가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나타나 화제가 되었다. 초등학교생, 운전자, 교사, 대학생, 주부, 대학교수, 여성단체회원들, 평화단체, 방송사, 신문사, 무직자, 종교인,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쏟아졌다. 평화폭지는 해외에서도 날아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사회적 화제가 되어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 뉴스 웹진 등 다양한 매체에서 집중 보도되었으며 각종 대중매체와 인터뷰 요청으로 이어졌다.

평화여성회는 9월 20일 여성단체협의회를 마친 후 이 폭지를 모아 미국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으로 향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 측은 공보부가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며 접수를 거절했다. 평화여성회는 우편으로 1차 분 3000여건의 평화메시지를 미대사관과 육박관, 참화대에 우송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예고 9월을 넘기자 네티즌들의 참여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캠페인 본부(강주혜 집이신아)를 마련하고 '평화폭지날리기' 포스터와, 스티커를 제작해서 대학교와 단체, 교회, 등에 배포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새로운 대책을 강구했다. 오프라인에서도 메시지를 받았다.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공습이 감행되면서 평화폭지는 5000여건에 도달했다. 평화폭지 캠페인과 함께 평화여성회는 9월 18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영약하여 세계 여성단체에 배포하고 평화폭지캠페인도 알렸다. 세계 단체들로부터 지지와 격려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캠페인 참가속도가 저조해지고 대중의 관심은 행차히 감소되었다. 이에 평화여성회는 모든 메시지를 모아 미국 백악관에 우송하는 것으로 일단 캠페인을 접었다. 오마이뉴스는 2001년 말, 오마이뉴스 20대 뉴스로 '평화폭지날리기'를 선정했다.

평화폭지 날리기 사이버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실명으로 전쟁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사와 요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각양 각층의 대중들 사이에 테러와 국제질서의 모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무력에 의한 사건해결보다 외교적 노력과 협상

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건강한 반전평화여론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평화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 평화촉지날리기 캠페인은 또한 평화여성의 사회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이번 테러사건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뜨거운 애도와 위로를 전해주었으며, 아울러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인해 또다시 무고하게 죽어갈지도 모를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들과 힘없는 민간인들에게도 깊은 우려와 마음으로 정평을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주었다.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새삼 놀라게 되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갖는 미국에 대한 시각의 변화였다. 이는 참혹한 테러를 한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테러사건이 우연이 일어난 것이 아님을 지적하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로 드러났다. 결국 일정정도는 미국이 자초한 테러 사건이었음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이를 계기로 그간 펼쳐왔던 대외교 정책을 수정하는 귀중한 자성의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는 따듯한 촉구와 목소리였다. 더불어 테러를 종식한다는 명목 하에 진행될 전쟁은 피의 악순환만을 낳을 것이라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평화와 용서와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테러를 막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아와 질병과 기나긴 전쟁의 피해로 인해 더 이상은 견디기가 어려운 아프간의 민중들에게 돌아치는 미사일과 폭탄 대신에 음식과 약을 보내야 한다는 애절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에도 많은 비판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의 보복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에게, 특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에게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답게 좀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전쟁을 위한 어떠한 국가적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촉구의 메시지도였다.

시민들의 반전운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2001년 12월 6일, 한국군의 아프간 전쟁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평화여성회는 12월 6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과전통적인 비준을 강령하려 하자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제출한 〈한국군 대 테러 파견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민중단체들과 함께 강행할 반대하는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도 열고 대응했다.

2) '여성평화참복시위' 주도 및 '전쟁반대여성평화행동' 결성

평화촉지날리기 캠페인과 함께 평화여성회는 30여 개 여성단체들을 조직, 9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테러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어떤 목적의 테러공격과 보복전쟁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의 성급한 과잉보복에 대한 우려와 반대, 보복전쟁으로 강화될 전세계 군비확장과 군사주의에 대한 경계,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한 최상에 무기실험 우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한국정부의 군사지원 반대와 인도적 지원 촉구, 무력대신 갈등을 외교적 대화와 협상

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갈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9월 19일에는 한국 36개 여성단체들의 공동성명서 및 여성계의 반전활동을 영역하여 이를 International Peace Bureau,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등 40여개 국외 단체 및 개인에게 E-mail로 발송했다.

9월 20일에는 여연, 여성외전회, 민주화, 한주교여성공동체, 등 40여 개 여성단체들과 함께 명동 들머리에서 여성평화헌목시위를 가졌다. 흰옷을 입고 이 시위 나온 참가자 100여명은 장미꽃을 들고 9.11 테러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평화기원의 의식을 가지는 동시에 전쟁중지와 평화를 촉구하는 첩박 시위를 가졌다. 여성들의 발빠른 대응은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10월 8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감행되자 평화여성회는 여성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전쟁반대 여성평화행동(여성행동)'이란 연대체를 결성하고 공동행동을 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후 여성행동은 10월 12일에 탑골공원에서 미국의 아프간전쟁불입 반대와 일본자위대 해외파병을 반대하는 여성평화시위를 가졌다. 이 시위는 바고할미를 등장시키는 문화적 퍼포먼스와 평화제해 귀신 추방의식, 아가기지귀와 속내외의 전쟁반대와 평화구호를 적어 전시하는 등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행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여성들은 1.미국의 아프간에 대한 보복 전쟁 중지 촉구와 2.아프간 여성들과 어린이를 비롯한 전쟁난민 및 피해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유엔과 각 국 정부의 대책 촉구하였으며 3.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 4.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반대하는 뜻을 시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1월 13일에는 여성행동이 공동으로 9.11 테러공격과 미국전쟁 그리고 여성이란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국제질서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전쟁국면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런 논의와 함께 여성행동은 단체별로 들어가면서 미국 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11월 16일까지 계속했다. 평화여성회는 여성행동단체들에게 전쟁국면에서 벌어지는 세계 NGO들의 대응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여성행동의 관심을 끌어내고 이끌어 나갔다.

3) 반전평화운동의 시민사회연대 활동

- '전쟁반대공동실현' 참가 및 반전평화운동 연대

이밖에도 평화여성회는 9월 27일 결성된 통일협회와 여연, 참여연대, 환경연합 등과 함께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시민사회 대토론회를 가지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같은 날 평화여성회가 참여한 전국 553개 시민단체들은 전쟁과 전쟁지원 반대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9월27일 오전 11시에 청와대와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또한 평화여성회는 9월 20일부터 결성되기 시작하여 765개 단체가 참가된 '전쟁반대 평화실현공

몽실현(몽몽실현)'에도 참가하여 10월 9일에는 서울, 동경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전쟁에 반대하고 아시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일본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일 전쟁반대운동 출범을 선포했다. 몽몽실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1개월이 되는 11월 8일에 공식 발족식과 함께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을 벌여 국내외에 뉴스가 되었다.

몽몽실현은 이후 전쟁반대 평화실현 법국민서명운동, 아프간난민지원 모금운동,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중집회, 아프간 난민돕기 반전평화문서트, 한국군 파병 국외비준동의 반대운동 등의 운동을 펼쳐나가며 한국 사회에 반전평화운동의 물결을 조성해 나갔다.

이와같은 반전운동에 적극 연대하면서 평화여성회는 12월 들어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어 테러조직 제거를 명분으로 한 폭정통치를 거론하기 시작하자 "2002 국제정세와 한반도 운명, 여성"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가지고 여성들이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토론하기도 하였다.

· 부시대통령 방한과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 반대 운동

9.11 사태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미국 부시대통령은 2002년을 '전 쟁의 해'로 선포하고 테러와의 전쟁 확대를 밝히더니 2002년 연두교서 발표에서는 북한과,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점관들이우리를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협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시사해 한반도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은 특히 부시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일해온 여성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었다.

부시의 강경 발언에 대한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사회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는 가운데 평화여성회는 2월7일 극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첫째, 세계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고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며, 군사패권적 세계질서를 만들어 가는 부시행정부의 초강경 발언의 태제

둘째,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을 증폭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군사행동 거부와 군사행동 대신 북한과 미국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요구

셋째,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명분으로 한 미국의 무기구입 강요 중단

넷째,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분명한 항의 표명

다섯째, 국익확대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고려한 언론 보도

여섯째, 미국 내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들, 여성단체, 평화단체들의 적극적 확산 반대운동 기대 등을 담아 한국시민사회와 언론에 배포했다.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국제사회와 국내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그의 한국방문일(2월 19-21일)이 다가오면서 한국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월 8일, 시민연대회의의 기자회견을 필두로, 2월 15일에는 여성 150인 평화요구 기자회견, 2월 18일에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2월 20일에는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인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범국민대회)로 이어지며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조성하는 부시대통령의 발언과 대북 강경 정책 그리고 F-15K 판매강요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평화여성회는 2월 15일, 여성계 인사 150인의 참여를 조직하여 여성150인 평화요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번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1)부시대통령이 한반도 대 테러 전쟁을 확대시킬 어떤 의도도, 계획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힐 것, 2)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책을 우방인 한국정부와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것, 3)미국이 북미기본합의서와 2000년 한미 공동보유키에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대외관계에서 체결한 합의나 협상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존중 할 것, 4)미국정부가 일관된 대북 정책을 밝힐 것, 5)6.15공동선언 이행 지지와 비사일방어체제 추진 및 무기강제 제약을 철회할 것, 7)일방주의 군사정책의 전환 등을 촉구하였다.

또한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한반도에 긴장과 위기감을 높이고 있는 미국 부시대통령에 대해 현정부의 포용정책 지지를 요구할 것, 북한에 대한 어떤 재한전경도 한반도 전체를 재앙으로 몰아넣게 될 것임을 남달리길 것, 한국인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에 총부리를 겨누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킬 것, 미국의 전두가 강대는 남북화해노력을 깨뜨리고 많은 한국인들에게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부시가 발한한 2월 20일에는 부시대통령의 도라산 방문시간에 부시의 강경 발언에 분노한 1만여 명의 시민이 모여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평화여성회는 이 대회에 참여할 여성들을 조직하고 100여 개의 아름다운 비둘기 피켓을 제작, 배포하여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위를 할 것을 만들어 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100여명의 여성들을 전면에 앉히고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는 결국 방패와 곤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대의 투입과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파진압으로 여성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시위참가자가 피를 흘리는 시위가 되고 말았다.

한국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세어지자 부시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그리고 '악의 축' 발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으로, 또한 '악의 축' 발언을 자제하는 것으로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고 돌아가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는 어떤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평화여성회는 소위 "2003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예측하며 이에 대응할 시민사회의 역할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 국의 평화단체, 여성단체에게 반전운동 지지 호소 및 연대

평화여성회는 이 성명서를 영여하여 세계 평화, 여성단체에 발송하여 부시의 한반도 정책이 야기할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한국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WILPF(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roposition One Committee, Veterans For Peace,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IFOR(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Action Center, Women and Life on the Earth, 등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평화단체들이 지지를 보내오고 이 성명서를 자신들의 홈페이지 올리거나 이메일 리스트에 배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동시에 평화여성회는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에서 진행하는 전쟁반대 홍보 캠페인 "No More Victim"에 지지 서명을 보내는 등 국제반전운동에도 지지와 연대를 제의하지 않았다.

평화와 상호공존을 위한 바램

미국정부는 테러와 반테러 전쟁을 그으면서 아프간을 순식간에 몇대미로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이라크, 북한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호시탐탐 그 나라들을 노리고 있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통해서 테러근절을 명분으로 자기편에 서기를 강요했지만 평화와 호민종들은 평화와 반평화의 전쟁을 그으면서 미국의 편에 서기를 거부했고, 또 거부하고 있다. 희망도 슬픔도 있어버린 채 더 이상 감정조차 실리지 않는 아프간 민중의 얼굴에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느껴보지도 못한 채 이미 세상을 다 살아버린 아프간 어린이의 눈망울 속에서 미국이 아프간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전혀 없다.

미국은 너무도 엄청난 세계적 충격 앞에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확전을 통한 군사적 패권 형성이 아닌 세계의 정의와 진실, 인류의 평화를 향한 대열로 완주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또한 삼심하면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북한위협론을 내세우면서 대북감경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평화위협행위에 경고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전쟁과 힘으로 국제질서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닌 사회적 소외자와의 연대, 적대적 관계를 상생적 관계로 바꾸는 화해와 상호공존 속에서 서서히 평화가 흐르는 세계적인 협력의 시대임을 부시행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진행한 평화여성회의 활동은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반평화적인 행동에 대한 경고이자 평화를 향한 열정적인 몸짓이었다. 하지만 활발하고 모범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운동에 있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 여성평화운동의 차별성과 내용성에 대한 담보와 함께 여성대중 현장에 뿌리내리는 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전망, 여성평화운동가 발굴 및 전문역량의 강화 등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 산재해 있다.

이는 성찰에서부터 평화갑수성을 키우는 훈련과 함께 반평화운동과 억압된 사회구조에 대한 민감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전쟁예망을 비롯한 평화분화 확산을 위해 대중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4.

참여단체 평화운동 사례 - 평화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의 '연대'모임입니다.

최정민

평화인권연대는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차이와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는 평화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98년 5월 창립되었습니다.

주소 : (121-871) 서울시 마포구 열리동 21-97 옥대기

전화 : 02-719-9085

전송 : 02-718-9085

홈페이지 : <http://peace.jinbo.net>

이메일 : peace@jinbo.net

흔히들 쉽게 전쟁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평화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아마도 폭력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물리적인 것, 그 점에서 전쟁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전쟁이 없어졌다고 폭력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상태를 과연 평화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물음이 평화인권연대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폭력=전쟁이라 생각하면 전쟁이 사라지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란 개념을 전쟁을 비롯한 물리적인 부분으로만 치환하지 않고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불평등, 폭력을 가져오는 구조적 메커니즘이라 본다면, 진정한 평화란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과 불평등이 없어진 상태,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억압이 제거되는 것이라 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인권연대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거대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폭력을 앞산내내는 사회적 메커니즘,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며 그리하여 참다운 인간의 권리를 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평화인권연대는 이러한 원칙에 동의하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팀(소모임)의 활발한

구성이 운영의 중심이 됩니다. 활동가들 서로가 관심 있고 흥미 있는 분야에 관한 팀들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팀 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얻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현재 6개의 팀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되는 모임도 있고 혹은 아직 세미나 모임에 만족하며 활동하는 모임도 있지만 단체 내에서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현실 '정치·사회적 관계, 주체의 삶 속에서 재구성하기 위한 활동의 장'이자, '대안적인 평화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진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단체의 운영 역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평화인권연대는 팀 또는 개인의 다차원적인 정치활동을 자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활동가 네트워크'를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원간의 차이를 존중하며 수평적 관계에서 연대하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성적 지향성, 신체적 장애여부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으며 단체의 일상적인 운영과 사업에 있어서 생태주의·평화주의·여성주의 등의 진보적인 노력을 적극 수용합니다. 또한 이는 정치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 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는 월간으로 발간되는 평화저널 『평화연대』를 통하여 평화인권연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또한 서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 소모임별 소통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평화행진

뜨거운 여름, 하지만 땀방울이 장계게 느껴지는 곳, 일상을 피해 건설적인 꿈을 꿀 수 있는 곳, 평화를 준비하는 대안마을 평화행진. 평화행진은 매년 여름 진행되는 행사이며 매년 조금씩 다른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캠프와 캠프 이후 한반도 반관와 지역을 돌아보는 행진으로 이루어지며 올해로써 3회째 행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행진은 무언가를 배우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목적 이외에도 평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꿈꾸는 소박한 일상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계를 잊고 졸릴 때 자고 눈 떠질 때 일어나기,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기, 육식을 지양하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며 캠프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정해진 규칙을 적용하기,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등이 그것입니다.

• 평화와 인권을 나누는 즐거움 - 워크샵 : 평화란 어떤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집단적인 노력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나가야 하는 '과정'이며, 인간의 구체적인 "인권"에 주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평화행진 2000에서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전통적인 사고관을 뒤집자는 의미로 '안보재정의 :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라는 주제로 '군사주의와 여성·환경·군축'등의 워크샵들이 진행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평화운동에 관련된 일관된 테마보다는 평화인권연대 활동가들이 그 동안 연구, 실천해왔던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팀별, 개인별 워크샵들이 진행되었습니다.

• 평화놀이터 : PEACE BAR, 장강술래, 들꽃담방, 병상, 별자리 찾기, 자기 닮은 초약들 찾기, 천연화장수 만들기, 풀피리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고무줄놀이, 한국음식과 대만음식이 만나면? 등등... 그 동안 잊고 지내왔지만 평화롭게 즐길 수 있었던 놀이들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자 알고 있거나 해보고 싶었던 놀이들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평화행진 : 매항리 구내 사적장과 송탄 새울터 버스루어 다녀왔습니다.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운동 모임

지난해와 올해 초에 걸쳐 병역거부군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으로 각종 토론회 개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상황 조사와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였고 최근 대체복무제도 입법화를 위해 거리 캠페인과 서명전 진행.

☐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반대운동 모임 'AGA(Anti Global Action)'

반세계화·반신자유주의라는 큰 테제 안에서 교육, 환경, 여성, 평화 등 다양한 대중운동 세력과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연대. 월드컵에 가려진 제3세계 노동자들의 인권문제, 발전노조 인권 탄압 실태 조사 활동 등.

☐ 대안적인 평화습관 만들기 '불길' 탐

평화능력을 키르기 위한 훈련을 하는 동시에 훈련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함. '평화습관 만들기'라는 주제로 일상에서부터 평화를 준비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소통 훈련 - 적극적으로 듣기, 느낌언어로 말하기에서 협상, 중재 훈련
평화교육 프로그램 - 평화로운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 환경과 평화팀 'E.N.D'

환경운동의 담론을 열린 소통과 논쟁의 장으로 열고자 하는 사람들...

세상을 녹색의 눈으로, 평화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세미나 모임!

☐ 군사주의와 여성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세미나 모임.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에 참여.

☐ 대안문화미디어 모임 'R.exe'

문화운동과 미디어 운동을 준비하고 실현하고 구성하려 하는 대안문화미디어 운동모임. 정보통신검열반대 활동, 청소년보호법반대 운동 등.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Gwyn Kirk and Margo Okazawa-Rey(미국 평화운동가)

오늘 이 강연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주최하신 한국교회여성연합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7년 3월 오키나와에서 열렸던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The East 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Militarism) 첫 번째 회의에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이경미 님이 참석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네트워크의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도 다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모든 사회적인, 도덕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정치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정의와 평화의 실현가능성을 종교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여성과 정치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 활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르코키와 나는 많은 생각을 함께 나누며 저술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발제 또한 우리 두 사람의 공동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 상호 관련된 이 두 지배체제는 실패 전 세계, 전 사회영역에 침투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제에서는 가부장제라는 단어를 집단적인 여성 위에 군림하는 가족, 지역사회, 또한 정부, 법, 의학, 종교와 같은 국가기구 속의 집단적인 남성지배체제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군사주의란 폭력과 무기사용에 기초한 지배체제로 정의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본, 자연자원, 지식, 무기생산과 군사양성 및 전쟁에 투자되는 정의적 활동 뿐 아니라, 군사훈련과 군사기지 설립, 폭력 훈련 및 실행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탈취하는 토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군사 훈련은 비인간화를 초래하며, 폭력적인 영화, TV, 비디오 게임과 어린이들의 놀이,

장난감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듯 사회 내의 폭력문화를 일반화하고 조정합니다.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를 분석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축으로서, 이 발제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석과 범위의 차원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모든 복합적인 사회현상은 각기 미시적(혹은 개인적), 중간적(혹은 사회집단적), 거시적, 전지구적인 네 가지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 주한미군은 주둔 미군 개인과 기지촌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필리핀 여성과의 상호관계와 같은 개인들의 문제에 집중되는 미시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시민에게 자행되는 주한미군 범죄를 불행한 개인적인 사고로 일축하는 미군 당국의 분죄 거론 방식이기도 합니다.

2) 공간적 혹은 사회집단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공동체 혹은 사회에 끼치는 미군기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각종 협정과 법적 동의안, 또한 기지촌 여성에 대한 처우, 그들의 지위에 관련되는 비공식적인 동의안들을 포함합니다. 미정부와 한국정부의 불평등한 관계, 소파협정(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s, SOFA)의 부당성은 이 수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전지구적 영역에서의 분석은 보다 광범위한 요소들, 즉 경제의 세계화, 생산과 고용, 이윤창출에 영향을 끼치는 군사주의의 문제에 접근합니다.

둘째, 억압과 저항의 토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성(gender), 인종, 계급, 민족의 네 가지 시각을 통해 이 개념을 조망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시각은 억압과 불평등의 독특한 구조를 드러나게 할 것이며, 또한 그 각각 억압구조들은 저항과 힘이 자리 잡고 있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성(gender) 문제를 통한 접근

남성은 세계 정역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상위계급 여성이 노동계급 남성보다 더 나은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 혜택조차 여성의 아버지,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여아와 남아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사회화됩니다. 남아들의 사회화에 있어서는 보다 강한 과 객관성, 이성적 사고가 강조되는 반면 여아들은 배려와 인내를 따복으로 하는 현신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 길러집니다. 여성들의 일곤 가사, 어린이와 노인 돌보기, 가족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 등으로 출현합니다.

군사주의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화에 근거한 토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적 덕목 (감함, 굳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개인적인 감정을 숨기는 것 등) 들은 산시아 엔코 (Cynthia Enloe)가 말한 것과 같이 군인다운 남성이 제발의 한 축으로서 군사 훈련시기에 한층 중요됩니다. 군사주의는 또한 여성에 관한 전형적인 개념들을 사용합니다. 여성은 군사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아들을 전향하여 내보내는 자랑스러운 어머니로서,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아내로서, 남성을 다시 전장에 나설 수 있도록 치료하는 간호사로서, 휴식과 오락을 제공하는 술집여성으로서 형상화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주의를 지원 합니다. 군사주의는 여성이 그 개념의 안쪽에 포함되더라도 남성 지배 체제입니다.

가부장제 안에는 순결한 젊은 여성들과 순결하지 못한 다른 여성들의 두 가지 범주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가부장제는 상호간에 통질감을 가질 수 있는 여성들을 나눈다. 왜냐하면 가부장제는 여성들에게 남성의 인정을 추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반영이 된다. “매춘”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가부장제에 기초한 특별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단지 그 여자가 매춘녀더라고 이해한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의 이러한 깊은 연관고리에 주목한다면,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계급적 시각을 통한 접근

자유, 민주주의의 화려한 수식어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미국은 계급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입니다. 미군정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 많은 이들은 빈민계급, 노동계급, 불우한 사회집단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이른바 빈민 징병을 거쳐 입대했거나, 자녀들의 의료보험 자격을 얻기 위해 군대를 택했거나, 대학진학의 기회를 얻기 위해 군대를 자원한 이들입니다. 군대는 도시의 가난한 고등학교와 지방에서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지역 학생들의 참가를 격렙니다. 계급적 시각만을 갖고 생각한다면, 대다수의 미군은 기지촌의 많은 여성들과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빈민 혹은 노동계급입니다.

계급적 시각의 또 다른 이점은 여성들 간의 계급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계급적 자각과 더불어, 각자 속에 있는 계급에 따라 어떠한 태도가 반영되는지를 분석하고, 어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끌고 나가야 할 이슈는 또한 무엇인지 분별해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인종문제를 통한 접근

미국 내에서 인종 이란, 유색인종, 특히 노예로 끌려와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노동력 재생산을 강요 받았던 역사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인 아메리칸으로부터 모든 계급의 백인들을 구별해내는 실질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인종적 위계질서는 백인을 가장 수위여, 흑인을 가장 하위에

두고 있으며 그 중간에 아시안과 라틴계 후손들을 배합합니다. 인종문제와 계급적 질서 사이에는 눈여겨 보아야 할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 다수는 빈민입니다. 그들은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도시 근교의 학교에 비해 빈약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족한 교육환경의 학교를 전전하다 결국 연금과 의료혜택이 없는 저임금의 직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주의는 이러한 계급적 배경조차 뛰어 넘는 개념입니다. 대학교육을 받은 중산층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 역시 인종적 잣대에 의해 차별 받으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량한 백인과 아시안들이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흑인 혹은 흑인 혼혈아들에게 쏟은 하는 동정심, 그들에 대한 낭만적 혹은 이국적 감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흑인 혼혈아들에게 쏟은 하는 전형적인 기대 또한 차별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은 스포츠에 유리한 체격조건과 연예인으로서의 자질을 타고 났으리라는 선입견으로 재단 되어 지곤 합니다.

인종차별주의를 통한 분석은 거시적 수준, 다시 말해 보다 광범위한 사회 내 인종주의와의 연관성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인종적 자각과 더불어, 피부색이 어떻게 군사주의와 거부장제에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끌고 나가야 할 이슈는 또한 무엇인지 분명히 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민족, 혹은 국가적 정체성을 통한 접근

본국에서 차별을 받는 주한 미군 내 노동계급이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들은 주둔지에서 단지 미군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쥐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대표자인 양 행세하곤 합니다. 미국 정부와 한국정부의 불평등한 관계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기지촌에서 한국인 여성을 만나는 미군들은 성, 인종, 국가적 차원으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시각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동맹 우방 등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외교 및 군사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파협정(SOFA)은 한국 국민의 막대한 손해와 손실에 기초하여 미군계인이 이득을 취하도록 작성되어 있는 협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간의 복합적이고도 불평등한 관계는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에 관한 부시 미 대통령의 언급, 남북통일에 대한 부시정부의 미약한 지원 등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 하는 현실상황은 향후 한반도 정세를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는 일본의 강력한 경제적 성장을 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평등한 국가관계의 일례로서 1910-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강점 역사를 주목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업들 또한 최근 필리핀에서 저임금 노동 착취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겠군요.

이렇듯 불평등한 관계들은 몇 가지 현저한 국가간의 차이점들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국가는

역시 가부장적인 보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회 기관들은 남성에 의해 지배됩니다. 남성들은 국가 행정기구, 법조계, 대학총장과 교수, 기업과 종역, 가족의 가장으로서 사회의 주류로 군림합니다. 사회적 제 관습은 위계질서, 불평등, 지배와 군림, 분리 등 남성적인 이성과 원칙에 기초해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국가간의 경제조차 뛰어 넘는 단단한 결속을 자랑한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때때론이 불법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기지촌을 전략적 소비물자로 간주하는 일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 혹은 국가주의는 사회변혁을 위한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때때로 성(gender)의 문제 또한 민족주의 이슈와 관련하여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지배하는 예로서 사용되 어지기도 합니다. 1995년 오키나와 12세 소녀 강간사건은 미군기지에 대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적개심을 회화, 강화하고, 수천의 인구를 시위 대오 속으로 불러들였던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키나와 운동 단체들은 그런 여성에 대한 군대 폭력을 반대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편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오키나와 여성 행동(Okinawan Women Act Against Military Violence)은 성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시각에 근거하여 그들의 활동 정면에서 이 이슈를 지속적으로 정점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기지촌 여성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은 한국인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억압하고 살인하기까지 하는 미군부대와 미군 게제인의 모만함과 우월감을 질타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이들은 기지촌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 혹은 러시아 여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 접근은 한국여성을 여성으로서 보다 한국인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 미군은 성, 계급, 인종, 민족의 차이를 차별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활동가라면 문제에 보다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차이에 기대어 차별을 양산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네 가지 각기 다른 시각을 함께 사용하여 논의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정부와 군부는 국가의 안보를 군대의 안보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견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더 크고 향상된 무기 개발과 군비 확보를 위해 여산확충을 강조하는 정부의 목소리는 미국에서 빈번하게 울려 나오곤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이 곧 국가에 대한 저항세력을 제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일입니까? 국가안보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저임금 확보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네 가지 차원, 즉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전지구적 차원에 근거 하여, 어떠한 변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떠한 변혁이 필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가에, 근본적인 두가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는 어떠한 사회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문제를 바라보는 종합적인 안목을 요구합니다. 가령, 군사적 관심사가 아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보개념의 재정립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에는 때항리 족적장 문제, 군사작전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비전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 교육적 전략--정보 유포, 육상과 회의 조직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 언론을 통한 전략유용한 언론매체를 찾고, 이 이슈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갖도록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 정치적 전략개입, 조직, 기관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도록 분석하는 작업은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는 정치가들을 지원하고, 선거 캠페인에서 정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밑 작업이 필요합니다.

* 행동적 전략시위, 철야농성, 파업, 보이콧 등을 통해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 연대망 구축다른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을 고려하는 동시에, 연대망 구축 가능성을 주의 깊게 모색하면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의 연대를 구성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택된 전략에는 구체적인 전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래적 의미에서의 안보 개념이란 아래 네가지 조건에 기초해야 함을 주장하며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1.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의식주에 관한 기본적인 요구가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인격적 존엄성, 개인,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4. 최소한 피할 수 있는 해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존하는 군사안보체제는 이러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건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안보의 본래적 의미에 관해, 매일매일의 축적된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성적이고도 영적인 강한 힘을 발휘하여 가족과 공동체를 지켜내고 슬픈 난관들을 헤쳐온 것은 여성들입니다. 군사주의와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 이 과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또한 여성의 힘과 지혜일 것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보장 - 안전보장 재(再)정의를 향해

군대 장기 주류(駐留)에 있어서 오키나와의 현실

다카사토 스즈요(기지 군대를 허락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

저는 1977년부터 1989년까지 도쿄와 오키나와에서 여성문제 상담원으로 일했었는데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 기지촌에서 미군 병사 상대로 매춘해서 살아왔던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 군대폭력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직결한 미군병 폭거는 20년이상 지난 후에도 여성들에게 심리적 상처가 패서 일상생활에 어두운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지금 저는 오키나와현 현도이며 인구 30만명인 나하시에서 의원으로 13년째를 맞이하여, 또 1995년 9월에 일어난 12살 소녀에 대한 3명의 미군병에 의한 강간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 인권침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를 낸 「기지 군대를 허락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의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16살 때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일본기독교단, 니시하라 교회 임원이고 또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원에서 선출되는 상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오키나와와 같이 장기에 걸쳐서 미군기지가 있고 그 존재가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아는 자료써 오늘날 같이 군대 폭력에 대해 폭력을 없애기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1. 지상 전쟁터에서 기지섬으로

오키나와는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7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크고 작은 섬들의 현이며 그 크기는 2254km²이고 일본 국토의 0.6%입니다. 이 작은 섬은 575년 전의 세계대전 때 50만명의 미군병에 의해 포격을 받고 1945년 3월 26일에서부터 시작한 약 3개월의 처참한 지상전으로 15만여명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문화유산 건축물을 비롯해 마을, 생산수단, 경제수단,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일본 최남단 국경방위로 주둔하는 약 10만명의 일본군에 의해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당

하고 중학생 남녀가 전투보조를 위한 징용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키나와 사투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간첩 용의로 팔살당하고 군 명령 강제 이주로 인한 말라리아 재난 등은 일본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쟁 희생이었습니다.

또 오키나와에는 강제 연행 당한 약 1만명인 「조선인군부」가 일본군 부대의 보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 위에 참병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여성이 오키나와에서 군대 위안부로 강요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군대 위안소 수는 군대 이동과 같이 설치되어 모은 설 130군대에 미친 것이 1992년의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전쟁 제형에 의하여 미군 실록부터 56년 지난 현재까지 미군기지는 그 기능을 강화하면서 존속하고 일본에 있는 미군 전용시설 중 75%가 오키나와에 집중 배치되어 있고 해병대 70%를 차지하는 17000명을 포함하는 27000명의 부대와 군속, 가족 합쳐서 상시 약 53000명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3개월의 처참한 지상전이 끝났는데도 오키나와의 비옥한 농지, 생선, 생활 사유지의 미군 강제 접수로 인해 주민생활이 압박되어 끊임없는 폭음, 실탄 연습사고 피해, 자연 환경 파괴, 그리고 특히 미군병에 의한 여성, 어린이에게의 강간 사건, 인권 침해 등 일상적인 비인간적인 환경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기지의 섬」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의 현실입니다.

2. 상처별 주위와 군대 메카니즘

1) 여성의 몸도 전쟁터

「철의 폭풍」과 마찬가지로였던 지상전의 종결도 여성에게는 하나의 공격일뿐이고 그것은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에의 공격, 철거한 지배의 실천으로, 전과(戰果), 보장(報獎)으로, 육망, 공포, 분노의 배수부로 미군은 군화로 섬을 밟아 망친 듯 여성의 몸을 밟아 망쳤습니다. 1949년 9월에는 겨우 성후 9개월인 여아가 강간당하고 1955년 9월에 6살 아이가 강간, 살해 당한 것도 포함해서 모든 연령과 모든 곳에서 납치, 강간, 살해가 빈발하고 그 결과로 다수 여성들의 출산.

1950년 6월, 조선전쟁 발발 때 모든 것을 잃은 오키나와 사람들은 미군 기지 건설 러시와 군 고문원으로 흡수되어 대량 병사직결로 주민지구에서 미군병이 다가왔을 때는 몸을 둘러서 경계하고 얼굴에 솜을 발라서 옷장이나 마루 밑에 숨어서 재난을 피했다 등 바로 무법지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미군은 강제점수한 땅의 일부를 반환해서 미군병 상대의 공인 태춘지역 「아여섬」 등이 탄생한 것으로 미군은 병사의 성적 방종을 일점 컨트롤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외로 보전 정책의 제일의 적으로 우선한 것이 섬별 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시아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지태춘지역이 미군기지 주변에 확대되었습니다.

1965~1973년까지의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기지 주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하루에 20~30명의

베트남 전쟁터에 직결된 병사들의 폭력의 합법화(내지는 배수구)였습니다. 베트남 귀환병을 총포하고 Bar나 롤링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것은 자살 행위(강간당한다)라고 하고 “침대 위에서 여자의 목을 조르고 난리치는 병사, 키문터에 있는 우리는 20분 지나도 손잡임 미군병이 안 나오면 방을 두드렸다. 베트남 귀환병은 살기를 띠고」있었습니다.

오끼나와 사람들은 전후 56년의 절반 27년 동안 미국 군사 지배하에 배치되어 가정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와 기본적인 인권도 빼앗긴 상태에서 초등학교의 제트기 추락사고나 군차량으로 인한 역사(餓死)사고, 연습사고나 빈발하는 미군의 인권침해, 범죄도 재판권이 없고, 미군병의 범죄피해도 거의 별 수 없이 참을 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어린이에 대한 강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기지 군대를 허락하지 않는 행동하는 여성들의 모임」이 1996년 2월부터 2000년 6월까지 4번의 개정을 거듭한 「오끼나와 미군병에 의한 여성에게의 성 범죄」연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면 특히 종전 직후에서 조선 전쟁, 베트남 전쟁까지의 미군병에 의한 여성에게의 성적 공격의 지독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합법 내용은 ① 2명부터 6명의 집단으로 습격한다. 기지내 군병사내에 데려가서 20-30명에게 남긴다. ② 손, 팔 등 두기를 휴대, 여성을 구술하려는 남성의 상상 ③ 발, 강연고수부채, 표지, 무릎, 도로, 집안, 기지내, 트럭이나 지프차 안 등 모든 곳에서 피해 당한다 ④ 강간에서 살해 ⑤엄밀 아가를 살해 ⑥강간에 인한 출산, 특히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강간 살상된 사할은 기지촌에서 일하는 여성 ⑦ 거의 처벌받지 않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해병대원으로 오끼나와 주류점함을 갖고 있는 D씨는 오끼나와 주류 전에 부대장에서 이런 지시를 받았답니다. 「이 섬에는 병사 한 사람당 한 명씩 매춘부가 있고 법률위반이 아니다. 다만 성병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꼭 콘돔을 써라」

D씨는 「이 말은 “너희들에게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재전국 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승전국의 특권이고 또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침략, 오욕의 수단으로 성적 수탈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역사에 그리고 현재 문명에도 보입니다.

베트남 전쟁, 조선전쟁에 있어서 과병 기지, 위안 기지로서의 기지매춘지대란 군대에는 합법적인 공간제도입니다.

군대의 본질은 부리짚은 성치별주의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전 미군병사가 사용하던 라이터에 새겨진 「광화의 이름 아래 죽이는 것도 처녀를 강간하는 것도 병사의 특권이며 임무이다!」라는 말은 일본의 군대 강제 위안부 문제에도 통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군대의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적 수탈은 정의(戰害)고양의 수단, 보장행위, 육방, 불만, 분노와 공포의 하수구로 폭력을 합법화하는 군대메카니즘과 일체된 것입니다.

부권주의사회, 군사력을 중시하는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에 두고 국가의 폭력당성을 위해서는 여성을 성적으로 수단화하는 것은 쉽게 합법으로 되어 전쟁 때의 강간에 머물지 않고 군대 입대시, 휴가중, 연습 후에 매춘가로 가는 것이 용인, 참려됩니다.

모든 「유사」에의 즉각적인 전력을 보유하기 위한 군사연습의 본질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인간으로 다시 만드는 것, 그 히스토리 상어가 되도록 의미없는 불가능한 명령을 내려서 고정하는 것, 어머니의 권위를 없애고 군 권위만이 권위라는 교육, 기초훈련으로 여성 밀사, 여성 경시하며 sex의 대상으로 한다. 여성이 없는 특수 환경 속에서 성 이야기만, 여성에게의 모든 욕을 쓴다. 공간에 관한 농담을 얼마든지 한다」D씨는 지적한다. 병사란 살아있는 무기, 살인머신화이며 하이테크놀러지 시대의 전쟁도 근본적으로는 이런 기본이 일관되어 있습니다.

1995년 9월에 일어난 미군병 3명에 의한 12살 소녀 강간사건으로 오키나와에서 미군범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을 때 백기 아시아 태평양지역사람들은 「자동차를 빌리는 돈이 있으면 여자를 살 걸 그랬지, 재물은 바보다」라는 발언이야말로 바로 군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부권, 부계주의 사회는 군대 주류를 간접적으로 용인, 존중

1)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 - 사적인 피해로 묵살하는 사회

흥으로 합법해서 여성을 감금하고 몇 주 다니는 미군병을 마을 주민이 살해해서 가마에 유기한 사건이 50년만에 발생한 것도 몇 년 전이었습니다. 수많은 소녀, 여성이 받은 폭력도 고발된 일이 없고 가족도 사회도 이것을 “치욕” “더러움”으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1949년 9월까지 미군병에 의한 어린아들의 수는 450명」 「1951년 5월, 전쟁 후 6년간의 강간 사건은 278건」 등이 당시 신문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숫자도 범인의 일각에 나타낼 뿐이고 오키나와 사회에도 예외가 아닌 가부장제, 성차별의식 속에서 성적 폭력에의 뿌리깊은 편견, 개인의 비극, 가족으로서의 치욕으로 사적 영역으로 머물게 만들어지고, 그만큼 군대주류 아래의 폭력은 보완되어 온 것입니다. 1950년대 초에는 벌써 미군병의 무서운 성적공격과 좁은 주택가에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잠깐, 보건, 교육관계자에서 제안된 것이 기지주변 공인폐촌지역제였습니다. 오키나와 사회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공한, 유곽제도가 종전 직전의 공습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여성,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목으로 각지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설치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타락, 주민의 위협방지의 대책으로 산재해 있는 폐촌부를 한 곳에 모아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하라」는 행정의 장이나 경찰관계자의 주장에 대해 인권 옹호, 부인해방의 입장에서 반대 목소리도 결국 1972년에 시정권이 일본에 복귀할 때까지의 22년동안 기지촌에 강제관리 폐촌이 만연하고 여성들은 미리 빛을 진 것으로 눈덩이처럼 이자가 붙어서 몸도 마음도 구속당하고 날마다 노골적인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서 누구를 지키려고 하는 건지, 지역사회, 공직기관은 미군병의 성적 공격에서 누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청소년을, 양가의 자녀들을, 그리고 사회의 공서양속(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몇몇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강간의 피해자나 어린이, 가족을 양육하는 자, 남편과 사별, 이혼한 여성들이었습니다.

한편, 성적 방과제의 역할에 대해서 기지 경제에 의존하는 오키나와 사회의 최전열(맨 앞)에서 여성들은 미군병들이 알아뜨리는 달라는 버는 역할도 맡게 된 것입니다.

1969년의 유구정부의 조사로는 약 7400만명의 여성이 때때론업에 종사하는데 이 숫자는 당시 여성인구가 50만명. 그 중에 10살-60살까지의 때때론업여성들을 계산하면 여성인구 40-50명에 한 명이 때때론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 미군 지배하에 배치되었는데 일부 여성들이 「전체의 안정을 위해」라고 해서 미군병의 공격의 받침대가 되었습니다.

2) 군대 여성에게의 폭력은 왜소화된다.

오키나와에서는 부리가 튼튼한 기지철거운동과 평화헌법 아래에 변화의기를 요구하는 복귀운동이 있습니다. 또 8살 소녀의 강간, 살해사건으로 인해 「어린이를 지키는 모임」이 부모와 교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사건사고에는 온 섬 사람들의 운동으로 고등학교생들까지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군병을 상대로 일하는 여성들이 강간당하고, 고살사체로 발견된 일이 몇 번씩이나 있어도 그것 때문에 현민집회가 열린 것이 없었습니다. 기지문제, 기지반대운동이란 표지 강제집수 반대운동, 연습사고, 폭을분제이고 여성에게의 폭력문제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문제로 머물러 왔던 것은 오키나와의 사회 자체가 가부장제의 사회인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이 군사기지가 장기에 걸쳐서 존재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용인하게 된 것에 연결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4. 여성, 어린이의 안전보장을 구한다. -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1) 불명통한 일미지위협정의 개정

이 협정은 일미 양국의 불명통한 관계 의거하는 뿐만 아니라 양국 공동의 뿌리깊은 상처받 의식에 의거하며 공무원인 사고나 범죄보다 훨씬 많은 군대 구성원에 인한 여성, 어린이에게의 범죄를 공무원의 행위, 사적 행위로 왜소화하는 것으로 범죄를 군 범죄를 보주는 체질은 기본적으로 양국에 공통한 것입니다.

군사 동맹국으로 알리는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하고 미군이 일본 국내에 주류해서 군사 연습을 하는 것을 보장하고 미국국적 군인, 군속이 자국내에서 보유하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생기는 여성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방치적, 환경파괴에 관한 기준이 군내법보다 약하고 피해자의 보상 등 지원책이 대등하지 않고 관계성이 결핍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군병을 아버지로 하는 일본 여성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봅시다. 미국과 독일 사이에서 체결된 지위 협정(본 협정)에는 미군병을 아버지로 한 아이를 인지하는 것, 양육비 분담의 책임 방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있어 부친의 아동 등에도 아이,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

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미 협정에서 확립 안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확실히 불결정하기 때문입니다.

2) 군(軍)을 안하는 주의를 진정한 안전을 보장

미군의 주류유지비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태러 예산」까지 포함해서 일본의 군사비는 세계 2위를 차지하여 그것에 의거하는 경제 세계화로 전제하는 한편 그 회생을 국토의 1%도 안되는 오키나와에 맡기는 큰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군사기지와의 공존을 강요당하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군사주의는 부권주의 사회에 뿌리 내린 것이며, 대등보다 힘의 지배를, 공생보다 종속을 요구합니다. 항구적으로 군대를 유지강화하는 것은 폭력집치의 보지이며, 권시, 유시를 불문하고 그 본질은 사회 전체를 받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여성, 어린이의 진정한 안전보장은 완전히 대극에 있습니다.

3) 국내 여성에게의 폭력에 대한 제법제도의 재검토

자기 나라에 외국군대를 주류하는데 있어서 공격함이 전혀없는 배치를 잡기에 겹쳐서 방치가 가능한 것은 정부, 국민의 오키나와에 대한 차별이 뿌리깊은 것과 성차별, 인종 차별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현재 강간죄는 강도죄보다 양형이 가볍고 또 신고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의 편견이 많아서 형행법에 따른 경찰의 대응은 second 리이프(2차 성폭행? 강간?)를 담당만합니다. 경찰, 재판에의 불신, 불안감은 뿌리깊기 때문에 범죄의 실제 고발은 범인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 아메리카 여성 네트워크로

우리는 1997년에 필리핀, 한국, 일본 오키나와의 여성들이 모여서 군사기지 아래에 있는 문제를 서로 내면서 공통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3차의 회의를 작년 6월에는 「국제 여성 서밋 - 안전 보장의 재정의를 향해」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진정한 안전보장은 다음의 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① 인간, 그리고 자연의 생명을 지탱하는 호나경 ② 의식주, 의료, 교육,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있는 것, ③ 인간의 존엄, 문화적인 정체성이 존중되는 것, ④ 사람이나 자연환경이 피할 수 없는 재해, 즉 「인재」에서 옹호받는 것

물론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된 사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키나와의 경험을 통해, 한국, 필리핀, 아메리카, 기타의 나라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 진정한 안전보장 사회로 향해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안정보장을 재정의한다.

2000. 6. 24. 오키나와 국제여성회담 기조강연

베타 뢰든(콜롬비아대학 평화교육학과)

(번역: 정유진, 주한미군법죄근절운동본부)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에서 인간의 안정보장으로

안정보장을 재정의하기 위해서는 안정보장과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에서 인간의 안정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정보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를 들어봅시다.

인간의 안정보장이란 세상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요로운 삶이란 인간과 인간의 연대에 의해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전지구적인 관점을 가져야합니다.

풍요로운 삶은 자원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환경을 유지해가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인간의 안정보장은 풍요로운 생활을 만들기 위해 각각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문에 사물을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는 자국이익추구주의에 의해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에 의한 인간의 안정보장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다음의 세가지 행동계획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안정보장을 재정의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정보장을 비군사화하는 것, 세 번째는 평화운동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조금씩 자세히 서술해봅시다.

1.안정보장의 재정의

* 인간이 중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안정보장은 인간이 중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든 면에서 그러합니다. 안정보장이라는 것은 매일 생활의 가운데서 느낄 수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고, 중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의 전지구적 안정보장과 국가 안정보장의 시스템은 권력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안정보장은 국가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지구적 안정보장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대기업과 기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은 그들의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운동도 다시 안정보장정책에 대해 개념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안정보장은 사람들의 안정보장을 위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필요, 개인의 정체성 그리고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전지구적 안정보장은 인간의 안정보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인류는 하나이고, 인간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지요. 이 관점에서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을 다음의 네가지를 기본으로 한 포괄적인 안정보장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첫째,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환경

둘째,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필요(의식주)가 충족될 수 있는 것

셋째, 개인의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가 존중되는 것

넷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안정,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사람들이 지켜질 수 있는 것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은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군비에 의한 안정보장은 기본을 무시하고 파괴한 위에서 성립되고 있습니다. 군사조직은 지키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입니다.

2.안정보장의 비군사화

* 평화유지활동은 분쟁, 대립의 예방을 최종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 안보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책, 그리고 개념을 '비군사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유지(Peace Keeping), 평화창조(Peace Making), 평화건설(Peace Building)이라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군사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안정보장, 글로벌 안정보장을 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평화유지활동은 분쟁과 대립을 예방하는 측면을 강화해나가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제일의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무력분쟁 등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자원의 재분배도 평화 유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또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한 비폭력의 사회변혁 방법도 갖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 군사조직과 군사비를 민중의 수요에 맞게 전환을!**

국가단위의 또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바꾸고, 군사조직과 군사비를 민중의 수요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비의 삭감분은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군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도적 원조, 또한 재해 원조를 위해서 훈련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제연합의 평화 유지활동을 군사적으로 보다 강화하려고 하는 호르브로그 미국 유엔대사 같은 주장에 반대를 표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분쟁의 징후를 예측하는, 넓은 분야에서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지요. 무력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분쟁과 대립당사자 쌍방의 이익에 맞는 조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 무력보다는 안전한 해결책을**

평화창조는 건설적인 분쟁과 대립 해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로 분쟁과 대립 해결의 방법은 초기의 분쟁해결에서 당사자 화해, 그리고 사회의 재구축까지 이미 많은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하면 우리들은 피해자, 가해자를 성가게 할 필요가 없고 파괴하고 파괴당하는 상황을 일어나게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분쟁과 대립의 해결은 무력보다 안전한 것입니다. 예를 하면 유엔에 관해서는 현재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그를 위해 예산도 늘려야합니다. 국제평화 아카데미 카터 센터 등의 기관이 행하는 분쟁 해결의 비용은 평화유지 활동과 군사개입 전후에 드는 비용보다 낮습니다.

*** 코소보 부흥에 드는 비용은 나토 군사개입의 3배!**

이처럼 분쟁 해결기관에 좀더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겠지요. 현재 코소보 부흥에 드는 비용은 나토 군사 개입 비용의 3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군사개입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에도 주민의 자발적인 공생의 경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화창조는 분쟁과 대립의 상태를 어떻게 바꾸어갈까라는 프로세스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공통의 이익을 찾는 것, 대립하는 것이 결코 얻는(이익이 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하는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 조정기능이 군사력을 대체하는 제도적 변혁이 필요하다.**

이 프로세스는 가해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평등한 사회를 새롭게 구하기 위해 생명이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국제법외법정장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안전보장을 비군사화하기 위해서는 조정기능이 군사력을 대체하는 것, 이와같은 정치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에 기초한 계획안은 이미 50개이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1999년 9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헤이그 시민대회에서는 21세기 헤이그 아젠다가 1만이상의 시민운동가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여 갈까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입니다. 인간의 안전보장은 전쟁을 없애는 것과 전쟁에 외거한 국가안전보장, 전지구적 안전보장을 개척해가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3. 평화운동의 재평가

* 연대를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넓히자.

평화운동의 재평가는 먼저 '세계의 모든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것은 안전보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확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지요.

인간의 안전보장은 사람들의 연대에서 출발합니다. 세계를 비군사화하는 일, 평화를 공통의 목표로 두고 연대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평화활동은 세계적인 시야에서 운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시스템을 고치고 인간을 위한 안전보장을 구하는 것이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안전보장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도 심각하게 되지요.

비군기지를 없애기 위해 우리들은 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역할을 정하여 연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 빈곤문제, 인권문제, 여성의 인권문제, 군대 성노예제도의 책임문제, 무기판매 금지, 핵무기의 근절 등에 몰두하고 있는 단체와 정보교환하고 함께 운동해가는 것도 인간의 안전보장을 달성하여가는 길일 것입니다. 이와같은 네트워크를 정책입안자들에게도 넓혀야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안전보장정책이 만주적으로 포괄적인 인간의 안전보장에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하겠지요.

미군주권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정부에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움직이게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안전보장정책에서 힘을 가진 미국 의회의 선거구민들과 정보를 넓혀가야하겠지요.

4. 오키나와에 제안한다

* 유연안전보장연구센터를 오키나와에!

최종적으로 기지전환에 관하여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키나와에 유연안전보장연구센터를 설치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인간의 안전보장연구를 하고 이를 위한 훈련과 기술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미군기지를 본영과 대립 해결 센터로 하는 것, 각각의 분쟁과 대립의 해결, 조기의 분쟁 예방 그리고 분쟁과 대립이 표면화되는 것을 대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현재 미국은 여기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역으로 오키나와에서 세계평화와 인간의 안전보장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치적인 대립을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간에 협력관계를 구하고 그런 세계를 오키나와로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과 아동, 군대 및 인권

국제 여성 연구 회의, 나하, 오키나와, 1997. 5. 1-4. 최종 성명서

우리는 오키나와, 일본 본토, 한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에서 온 여성 활동가, 정책 결정자, 학자, 단체활동가로서 각 나라에서 미군 주둔이 여성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일 동안 미군이 시민(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희생자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함께 만들었다. 우리는 미군 아버지가 버린 미국계 아시아 아동의 곤경과 미군 주둔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미군기지 주변의 비인간적이고 착취적인 폐쇄 시스템에 속해 있는 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현재 미군기지와 미군에 직통되는 다양한 공식적인 협정과 미국에서 여성과 아동에게 사용하는 높은 비율의 군대의 효과를 고려하였다. 우리는 군대를, 군인들을 전쟁 기계로 만들고 지역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구조적 폭력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논의에 기초하여 미군 주둔이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고자 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필리핀 정부들도 이에 공범임을 확인하였다.

미국군대 운영에 관해 논의할 때 늘 주변화되는 여성들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의 연구 결과,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 보다 더 분명히 많은 뚜렷한 유사점이 있음을 보았다. 여성 활동가, 정책 결정자, 변호사, 학자로서 우리는 서로의 국경을 넘어 정의를 기초하여 진정한 안전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 특히 여성과 아동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 계획으로 세계를 향해 함께 일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미군의 영향을 받는 여성과 아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 따른 대안적인 경제 제도를 만

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현존하는 공식 협정과는 독립된, 여성에 대한 군대 폭력을 예방하는 새로운 지침을 확립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미국과 일본, 한국 정부들 간에 방위협정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땅과 강을 회복하기 위해 독성 오염물을 제거하는 환경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당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 미국정부는 그들의 지속적인 군대의 주문을 규정하는 데에 있어, 헌법 조항과 국가 법률로 고조하게 피해야 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 각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지원하는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각국 정부는 미군의 여성 폭력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 모든 군대의 “휴식과 오락 프로그램”에서 지역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학대와 착취를 금지하여야 한다.
- 모든 군인은 기지 주변에서 살거나 일하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성희롱 및 학대 예방을 목표로 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각국 정부는 미군과 미국계 아시아 아동을 포함한 미군의 자녀에게 봉사하는 여성의 보건, 교육, 훈련 및 독립을 위한 실질적인 기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 미국 정부와 일본, 한국, 필리핀 정부는 미국계 아시아 아동을 위한 재정적 책임을 정적으로 부담하고 미국정부는 이 세 나라의 모든 미국계 아시아인에게 적용되는 이민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 모든 미군 기지, 무기 및 군인들이 일본과 한국에서 사라져야 한다.
- 각국 정부는 미국에서 행해지는 것처럼 군대 활동과 운영에 기인한 보건 상태에 대한 연구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키데나 공군기지 군방에서 저체중 출산이 발생했음)
- 각국 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군기지의 주변 정화에 전적인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모든 기지 전환 프로젝트에서 여성 문제에 핵심적 중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기지 반환 의사 결정에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에서 부담하는 미군 지원 경비는 여성과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프로그램 운용에 쓰여야 한다. 미군이 주둔한 땅의 사용은 과거 필리핀 수빅만 기지와 할라크 공군 기지에서 그랬듯이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보다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지역, 국가, 국제 미디어는 여기에서 언급한 문제와 관심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미군이 부분하는 것의 영향에 대해 대중을 교육해야 한다.

우리는 각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책임지도록 할 것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폭넓은 지지기반을 이루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97, 5. 4.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보 재정의”

미군사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네트워크 2회 국제회의,

워싱턴, 1998. 10. 9-13, 최종성명서

한국, 필리핀, 오키나와, 일본본토 그리고 미국에서 모인 55명의 여성활동가들이 워싱턴에서 미군사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네트워크의 두 번째 회의에 참석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지역에서 여성과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 군대의 정책들이 결정되는 이곳, 워싱턴에서 모이기로 결정했다.

5일간의 회의 동안 우리는 각 나라의 미군주둔과 군사화와 관련된 인간들을 보냈다. 우리는 미국 법무부의 직원들, 하원의원들과 스태프들에게 간략하게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 안전들과 관련된 여성들의 조직에 관해 민중단체와 대학생들과 정보를 교환했다. 또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보를 재정립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연구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정리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오키나와 나하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발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군기지와 군사작전들이 동아시아 지역과 군대와 관련이 있는 개인 그리고 미국의 가난하고 노동자 계층의 여성, 아동, 청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 * 현지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미국 군인의 폭행은 어쩌다 일어난 사건으로, 일탈적 행동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

- * 군인아버지에게 버려지고, 극심한 선입관과 편견에 둘러싸여 아시아인의 어머니가 홀로 양육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속의 아픔들.
- * 미군활동에 의해 우리의 땅과 물은 독성으로 오염되고 지역사회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지만 안전한 환경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 *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가해지는 군대 내 그리고 군인가족내의 성추행, 신체적인 폭력 그리고 정신적인 학대.
- * 가난하고 노동자계층의 흑인, 라틴계 청년들에게 집중된 신병소집과 미국 고등학교 곳곳에 퍼져있는 JROTC 프로그램.

여기에 더해, 미국과 주외국간의 불평등하고 제한적인 협정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의 SOFA 와 미국과 필리핀간의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공식적인 협정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미군기지나 미군들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주지만 여성, 아동, 현지사회 또는 자연환경을 위한 진정한 안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의 구체적인 요구를 의회에서 발언하기를 요청한다.

1. 조기 주둔과 조기 주둔교육을 통해 현지 사회의 관습, 법, 젠더 이슈 그리고 폭력방지를 혼란시킴으로써 군범죄를 방지한다. 각 집단마다 한 사람을 정하여 전체적 상황을 감독, 유지, 책임, 상담한다. 인권침해에 관한 강한 처벌 조항을 만들고, 피해자(현지 또는 군대)법을 체제내에서 수사를 하며 양쪽의 독립적인 수사와 처벌을 인정한다.
2. 모든 군인들은 주둔국의 엄격한 운전시합을 보게하고 동아시아에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모든 보상금과 보해를 물어야한다. 이 제안을 실행하기 전까지의 피해자의 보상금은 미국정부의 책임져야한다.
3. 방문군협정(VFA)을 재협상하고 필리핀의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시켜라.
4. 여성에 대한 폭력법과 (Violence against Women ACT II (HR 3514)), 군인에 의해 범죄된 폭력법(Title V) 통과시켜라.

3. 필리핀과 일본에서 미국 시민자를 아버지로 둔 사람들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허용하는 정정조항인 이주와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HR 2540))을 통과시켜라.
6. 연방국가의 군대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직업훈련, 건강보험 체계, 주거 그리고 여성, 아동, 젊은이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을 늘여라.
7.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자 했던 Marissa C. Navidad.(미국계 필리핀인)의 비자거부에 이유를 완전 공개해라. 회의 주관자들의 초청편지와 미국측 대표 John Conyers와 Barbara Lee의 편지, 완전한 재정적인 보조를 한다는 주최자의 편지 그리고 Navidad가 회의 후에는 반드시 미국을 떠난다는 증명을 해준 필리핀 단체의 편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닐라에 있는 미대사관은 세 번이나 비자를 거부했다.

미군사주위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

(번역: 장희원, 곁화를 만드는 여성회)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

(International Women's summit to Redefine Security)

나하, 오키나와, 일본, 2000. 6. 22-25, 최종 성명서

2000년 7월 21-23일, 오키나와에서 열릴 G-8정상들의 정기회담 전날,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한국, 일본 본토, 미국, 오키나와에서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 회원 91명이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 (International Women's summit to Redefine Security)을 가졌다. 우리들은 활동가, 교사, 학생, 연구자, 공무원, 육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의 생존자이며 동시에 우리들은 딸, 어머니 그리고 아내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G8이 경제적 원칙으로 갖고 있는 '국가안보' 개념에 도전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경제적 원칙들은 절대로 진정한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정함을 심어주며 자연 환경을 황폐화시킨다. 이 경제적 원칙들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군사주의와 복잡하게 얽혀있다. 군대는 무기의 개발, 상품화 그리고 판매를 통해 다국적 기업과 주주들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군대는 현지 사람들을 지배하며 세계 경제 체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한다. 현재의 경제 체계는 탐욕, 공포, 지배욕에 의존하며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환경을 지배하고자하는 욕망으로 표현되는 "타인"에 대한 대상화에 의존해있다. 기득권, 권력, 부지 그리고 무력감 포함, 불평등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확고히 지속시키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번 여성회담은 나하, 오키나와(1997)와 워싱턴(1998)에 열렸던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여성들의 강한 국제적인 연대와 진정한 안보와 평화에 대한 아젠다를 내기 위한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 회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들은 진정한 안보는 다음 4가지 항목에 근거한다고 단언한다.

- *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의 삶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
- *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의, 식, 주 및 건강 보험 체계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 *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차이는 인정, 존중되어야 한다.
- * 인간과 자연환경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안보를 이루기 위한 세계도 안전한 사회도 없다. 그러나 국제적인 평화, 인권 단체에서는 진정한 안보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많은 세부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대안에는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의 구체적인 제안, 조기 경보 절차, 중재 활동 그리고 황폐해진 땅과 사회의 복구와 재건 등이 있다. 진정한 안보를 위한 발전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국제여성회합의 참가자들은 군사화된 질서가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었다. 단계적으로 비무장화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비군사화의 대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군사 작전, 군사비 그리고 군사 문화를 줄여나가기 한다.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들은 G-8 국가 정상들과 우리의 정부에 다음을 요구한다.

- * 비에티스, 푸에르토리코의 폭격을 중단하라; 만다나오, 필리핀의 전쟁을 중단하라.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라; 오키나와에 새로운 군사기지화 군사기지교체에 대한 계획을 중단하라.(베노르의 헬리콥터 발착장의 건설 계획)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는 이 지역에서 완전한 군대 철수와 기초가 된다.
- *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을 개정하라. 이것은 오키나와 일본 본토, 한국 그리고 필리핀의 미군기지의 완전한 철수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이다.
- * 이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활동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제공해야하는 미일 신 가이드라인(US-Japan Defense Guideline)을 반대한다.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 헌법 제9조에 위반된다.
- * 일반사람들도 군범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를 비준하라.
- * 군대 폭성 폐기물과 미군주둔 결과로 발생한 여성과 아이들에게 가해진 폭력의 생존자, 개인 피해자 그리고 주둔국에 보상하라.

--- 구체적으로:

1. 군대 폐기물에 관한 국제민중회담(International Grassroots Summit for Military Toxics)(10월, 1999, 워싱턴)에서 승인한 주둔국 권리법안(Host Country Bill of Rights)을 채택하라.

2.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즉 주둔국에서 일어난 폭력, 군부대에서의 성폭행 그리고 군인 가족 내의 가정폭력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금을 제공하라.
- * 미국과 주둔국 정부는 아메리시안(Amerasian) 아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달에 책임을 져라.
- * 즉시 비군사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한을 정하여 군사비를 감축하라.
- 구체적으로:
1. 미군주둔을 지원하는 일본의 "태려 예산"을 없애라.
2. 군사비의 계속적인 축소를 약속하라. (예:1년에 5%) 그리고 이 경비를 군사작전의 생존자와 피해자의 보상과 구제에 할당하라.
3. 군사적 충돌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라.
4. 기초 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 건강 보험 체계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라.
- * 새로운 무기개발과 시험 발사 그리고 무기 판매를 중단하라.
- * 여성들의 권결, 지위 그리고 이슈들이 평화와 안보의 모든 부분에 중심이 되고 부대의 철수와 전환에 관한 결정과 계획에 여성들을 참여시켜야한다.
- * 여성 조직은 평화협상과 국가 재편성 문제의 모든 부분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 막 시작되는 북한과 남한의 대화라고 할 수 있다.
- * 군사조직과 군사지역의 전환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과 계획이어야 하며 문화적으로 적절해야한다.

우리는 군사 안보는 여러모로 모순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내렸다. 현재 군사화된 국제 안보체계는 자연 환경,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

국제여성회담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여성 네트워크

(번역: 장희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성(gender)과 인간 안보 네트워크

20001. 9. 5개 대륙, 성명서

우리는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다. 우리들은 깊은 분노, 두려움, 희망, 결단, 인내, 성급함, 단호한 신념, 상식,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가능성, 삶과 인간 공동체 기적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의무로 움직인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의 방식을 버리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안보란 가정과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믿는다. 국가는 가장 노출이 되고 위협이 있을 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우리의 삶, 공동체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에 완전히 참여하여 새로운 현실의 평화 문화를 창조하고 나누고 싶다.

평화의 문화는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로부터 성장하고 그것은 현재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경제, 군사적 중심 구조(삼병하달식)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권력관계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 개인에서 전 세계 차원으로 걸쳐있으며 인간관계 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가져온다.

여성들은 가정에서부터 정경터까지 가장 억압적인 폭력을 겪는다. 인간안보는 우리들에게 모든 형태의 폭력에서 상호 연결점을 알고,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말하기를 호소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폭력의 형태는 여성과 자연 환경 모두 자원으로 취급됨을 뜻하며 남성 우위 구조 안에서 폭력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는 삶에 대한 깊은 존경과 억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는 서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약속, 믿음과 돌봄의 마음을 키우는 것. 다름과 갈등의 건설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인보는 살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표현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고, 휴식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것이다.

인간안보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몸, 생각 그리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에 관해 말 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가정, 거리, 학교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폭력을 막을 수 없다.

인간안보는 다양성, 자주적 결정 그리고 자유로운(박탈, 모든 형태의 차별, 그리고 불공평과 억압에서의 자유: 표현과 개인적, 사회적 관계형성의 자유)을 의미한다. 안보는 부모와 아이, 교사 와 학생, 지도자, 정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 우리를 있게 하는 삶의 연결고리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다.

우리 안보는 자원의 공유를 요구한다. 자원은 불공정한 부의 분배, 북쪽과 남쪽 권력국가들의 과소비와 낭비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 국가 안의 불평등으로 매일 침해당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지구자원의 현명하고 올바른 사용으로 달성될 수 있다. 우리는 자원을 공유하는 방법을 만들고, 사람들의 태려하는 태도, 기술, 지식, 경험 그리고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탐욕과 소비주의 그리고 현재 세계화에서 드러나는 이익 추구를 초월해야한다.

평화의 문화는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의 소리가 경청되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과 건강 보형제 그리고 믿음만한 세계 자원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양이 풍부한 음식, 청결 그리고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잠을 자고, 웃을 일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안정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우리는 사랑, 소속감 그리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여유가 있고, 운동, 휴식, 심성을 평화롭게 즐긴다. 우리는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웃음과 즐거움을 가진다. 평화 문화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규율을 갖고 모든 형태의 폭력을 고발한다. 우리는 정신적인 성숙과 만족 그리고 육체의 통전성을 가진다.

인간 안보는 삶에 대한 존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기본원리: 공정하고 유효한 국 제법: 개인과 개인간의 의사소통: 평화로운 갈등해결의 약속: 자원(재료와 정보)의 공평한 분배: 경제제도에 대한 민주적인 관리; 그리고 생물학적 건강.

평화의 문화 안에서 인간안보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달려있고 모든 삶의 모습이 가능하다고 믿게 해준다. 이것을 현실화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부와 모든 권력들에게 군사화된 안보를 중단할 것과 우리들이 평화의 문화로 향하는데 폭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보즈에 아키야시 / 자넷 거슨 / 마코 오키자와 헤이 / 다카자토 스즈요 / 엘리자베스 루 /
구엔 커크 외 20명 (번역: 장희원, 평화물만드는여성회)

